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英, 금융서비스법 도입...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평가
2. 글로벌 인지도, 암호화폐 92% vs 웹3 24%...패러다임 전환기 도달 지적
3. EU, 은행의 암호화폐 자본규정 합의...은행의 시장진출 메리트 차단
4. 코인베이스, SEC 제소에 답변서 조기 제출...창의적 방어 전략 평가
5. 코인베이스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보안 검사 통해 안전 강조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英, 금융서비스법 도입...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 규제 본격화 평가

- EU 규제에서 탈피해 영국만의 암호화 규제 본격화...산업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동시 추진 강조
- 영국식 암호화폐 규제,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접근 평가...사업자 배려로 EU보다 두바이에 가깝다고 지적,

영국 찰스 3세 국왕이 규제 기관에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감독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금융서비스 및 시장법 2023)에 서명해 입법이 완료됐고, 영국 정부는 이번 법이 영국 경제를 위한 로켓 부스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 **英 금융서비스법, EU 규제에서 탈피해 영국만의 규제 본격화...암호자산, 성장과 보호를 동시 추진 강조**

- 영국 재무부(HM Treasury)는 '23년 6월 29일 금융서비스 및 시장법안(FSMB)*이 왕실 재가를 받았다고 밝히고, 이번 조치가 영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강조하고 FSMB에 대한 높은 기대치를 표명
-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 브렉시트 이후 사문화된 EU 규정을 폐기하고, 규제 기관에 영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더 많은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으로 2022년 7월에 도입됨
- 재무부는 FSMB가 경제를 성장시키고, 개방적이고, 지속 가능하며, 기술적으로 진보된 금융서비스 창출을 위한 정부 비전의 핵심이라고 강조
- FSMB는 기존 EU 규정이 적용된 금융서비스 규제를 영국 시장에 맞게 조정해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서 영국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비자 및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기회 창출을 목표로 제시
- EU가 암호화폐 규제안 MiCA를 최종 승인해 글로벌 암호화폐 규제를 선도하고 있는 가운데, EU와 경쟁 관계에 있는 영국*이 EU MiCA에 맞설 규제 프레임워크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는 평가
- * 영국은 브렉시트('21.1) 전부터 암호화폐 규제를 적용했지만, '22년부터 EU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자적 암호화폐 법률 및 규정 도입을 추진
- 영국만의 금융 규제를 표방한 FSMB는 ▲금융서비스 규제 기관의 권한 강화 ▲불필요한 도매시장 규제 제거 ▲현금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공인 결제사기(APP)* 보호 강화 ▲암호자산 규제를 통한 안전한 채택 지원 ▲블록체인의 금융 도입 촉진을 위한 샌드박스 설립 등이 담김
- * authorised Push Payment : 피해자를 속여 합법적 수취인 사칭 계좌로 자금을 이체하도록 하는 사기
- 재무부는 FSMB 도입으로 영국만의 새로운 규정이 도입됐고, 솔벤시 II 개혁*을 통해 약 1,000억 파운드의 생산적 투자 촉진과 혁신을 앞당겨 영국 경제를 성장시킬 것이라고 강조
- * Solvency II : 재정 자원, 지배구조 및 책임, 위험 평가 및 관리, 감독, 보고 및 공개 등이 담긴 보험 회사 및 그룹에 대한 규제 요건 규정으로, 2016년 1월 1일 발효됨. 영국 정부는 영국에 불필요한 기존 EU 규제 요소(보고 요건 및 내부 모델 승인 규정) 등을 삭제하고 규제 대상 자산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규제 정비 작업을 진행하고 있음
- 또한, FSMB가 영국 경제 성장과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청(FCA)*과 건전성감독청(PRA)*에 정기적인 보고 체계 확립과 비용 편익분석에 대한 새로운 2차 목표를 부여한다고 강조
- * Financial Conduct Authority : 영국의 독립적 금융 규제 기관으로 금융 시장 무결성, 경쟁 보장 등을 핵심 목표로 삼아 금융서비스 제공 기업을 포함한 약 5만 개 기업 행위를 규제함
- * Prudential Regulation Authority : 영국의 금융서비스 규제 기관으로 2012년 금융서비스 법에 따라 설립됐고, 은행, 보험사, 신용협동조합 등을 감독하며, 기업의 안전과 건전성 촉진에 중점을 둬

- 재무부 앤드루 그리피스(Andrew Griffith) 장관은 획기적인 법안의 통과로 영국 기업과 사용자는 성장과 보호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고, 오래된 EU 규정 폐지로 수십억 달러의 투자 유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
- 또한, 이런 역동적 변화와 함께 영국 투자 절차를 간소화하는 영국 상장 제도에 대한 검토가 이뤄지고 있어, 향후 영국은 기업이 기업공개(IPO)를 하기에 최적의 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

▶ FSMB, 디지털 자산을 공식 금융으로 인정...주요 규제 기관에 디지털자산 규정 제정 권한을 부여

- 재무부는 '23년 2월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를 공개했고, 4월 디지털 자산의 기존 금융 규제(FSMA)에 포함을 결정한 데 이어, 이번에 통과한 FSMB는 FCA와 PRA에 디지털 자산 규정을 제정할 권한을 부여
-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법안 통과로 영국이 암호화 자산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를 보유하게 됐다고 평가
- FSMB는 영국 금융서비스를 감독하는 규제 프레임워크(FSMA)*의 기존 규정을 암호화폐를 포함한 디지털 자산과 스테이블코인으로 확대했고, 이는 디지털자산 활동을 공식 금융 활동으로 인정한다는 의미

*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Act 2000

- 이미 재무부가 디지털자산 입법 논의에서 ▲디지털자산에 부합하는 발행 및 공시 제도 수립 ▲디지털 자산 중개자와 수탁자 규정 강화 ▲디지털자산에 특화된 시장 남용 제도 도입 등을 제안했고, FSMB가 이를 수용해 영국의 디지털자산 규제 골격을 이룰 것으로 전망
- 재무부는 입법 논의에서 디지털자산 입법 제안은 FTX 등 시장 실패를 고려해 디지털 자산 허브를 목표로 하는 정부 목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에서 디지털자산의 리스크 완화를 목표로 한다고 언급
- 암호화폐 업계는 현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널리 알려진 암호화폐 옹호론자로 총리 임명 전부터 런던의 글로벌 암호화폐 허브 육성과 스테이블코인 규제 필요성을 강조해 온 점에 주목해 이번 FSMB 통과로 영국 금융 정책에 암호화폐 친화적 내용이 반영될 것으로 기대

▶ 암호자산 규제 임무만 부여하고 세부 내용은 부재...FCA·PRA 등이 '24년까지 개발 예정, 불투명성 존재

- 일각에서는 FSMB가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법이 아닌 탓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
- 이들은 FSMB가 영국 정부와 규제 당국에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임무만 부여하고, 암호화폐 규제를 위한 구체적 규정 도입과 시행은 재무부, FCA, 영란은행, 결제 시스템 규제 기관의 몫으로 남았다고 지적*
- * 반면, EU는 암호화폐 규제 관련 대부분 사항이 결정됐고, 개별 EU 회원국의 규제 통합만 남아 있어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EU에 피해 크게 더디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황
-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 세부 내용은 '24년 들어 완성될 것으로 보이며, 현 단계에서 영국 암호화폐 규제는 크게 달라지지 않을 전망
- 결국, FSMB가 암호화폐와 스테이블코인에 실제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고, 정부 당국 입장에 따라 크게 달라질 부문이라 매우 불투명하다고 지적
- 코인긱(CoinGeek) 등 암호화폐 전문 매체는 영국 FSMB가 EU MiCA만큼 광범위하지 않으며, 디지털 자산에 중점을 둔 법안도 아니며, 영국의 금융 규칙 업데이트를 위한 법이라고 평가하고, 디지털 자산 규제를 강조할수록 EU MiCA와 유사해질 것으로 전망

- 암호화폐 업계는 이미 많은 내용이 결정된 EU 규제를 영국이 상당히 유사하게 따를 가능성도 적지 않다고 분석하고, 영국 정부의 동향에 관심을 집중
- '23년 6월 영국 법률위원회는 암호화폐 고유 특성을 받아들이고,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암호화 자산에 대해 별도의 재산 범주를 새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권고*
* 영국 법률위원회는 '22년 말부터 법무부 요청으로 암호화폐와 관련된 법적 문제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음
- 법률위원회는 이러한 조치가 암호자산의 글로벌 허브를 지향하는 정부 목표를 뒷받침한다고 강조하고, 디지털 자산 관련 법률 문제를 논의할 전문가 패널 구성을 제안

▶ **영국식 암호화폐 규제,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접근 평가...사업자 배려로 EU보다 두바이에 가깝다고 지적**

- 암호화폐 업계는 영국의 암호화폐 규제에 대한 접근이 EU나 미국과 비교해 보면, 상당히 다르다고 평가
- 현재 유럽의 암호화폐 허브로 꼽히는 스위스는 규제가 매우 구체적이며 이미 몇 년 전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EU는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으로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
- 미국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새로 주목받는 두바이는 규제가 상대적으로 관대한 편으로 평가됨
- 영국 정부는 암호화폐 규제에서 ▲소비자 보호 ▲혁신 촉진 ▲금융 범죄 차단 등에 초점을 맞춘 효과적인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에 주력한다고 강조함
- 업계는 영국 암호화폐 규제가 EU나 스위스와 다르게 암호화폐 규제를 규제 기관에 맡겨 더 역동적이고 부드러운 접근이라고 평가하고, 암호화폐 사업자에게 더 많은 여유를 주는 장점이 있다고 분석
- 이는 암호화폐 허브 도약을 위한 영국 정부의 전략적 결정으로, 이런 점에서 스위스나 EU보다는 두바이에 가까운 접근이라고 평가
- 업계는 어떤 접근이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법적, 사회적 측면에서 더 큰 성과를 거두지는 더 지켜봐야 하며, 포용적 접근이 암호화폐 산업 성장을 촉진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서비스 운영자의 부도덕한 태도를 용인할 경우 더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
- 영국 프레임워크가 최종 결정되지 않았지만, 암호화폐의 혁신을 장려하고 투자 유치를 위한 산업 친화적 내용이 다수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고, 유연한 라이선스 및 세금 혜택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

- 영국 정부가 독자 금융 규제 방안을 담은 '금융서비스법 2023'의 왕실 재가를 마치고, 본격적인 산업 육성을 강조하고 나섰고, 업계는 영국이 암호화폐 규제 프레임워크 보유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
- 동 법은 암호자산 규제 임무를 부여했지만, 세부 내용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으며, 영국이 암호화폐 허브를 강조하고 있어 EU 규제보다는 두바이 규제에 가까운 산업 친화적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

[출처]

- Cryptonomist, 'Stablecoin: New crypto regulation approved in the UK' 2023.06.30.
- gov.uk, "Rocket boost for UK economy as Financial Services and Markets Bill receives Royal Assent", 2023.06.29.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글로벌 인지도, 암호화폐 92% vs 웹3 24%,...패러다임 전환기 도달 지적

- 웹3 낮은 인지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 공감대 폭넓게 존재...사용자(User)에서 빌더(Builder)로 개념 변화 필요
- 신원·소유권에 대한 더 큰 권한,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콘텐츠 수익 공유 희망...웹3와 저변 공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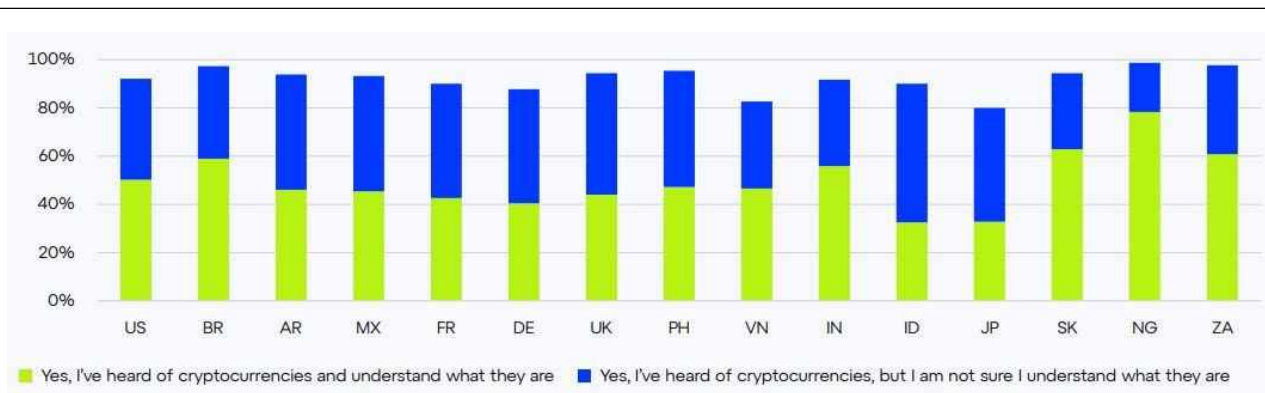
웹3 전문기업 컨센시스(Consensys)가 전 세계 15개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한 글로벌 웹3 인식조사*에서 전 세계 암호화폐 인지도는 92%로 높지만, 웹3는 24%에 불과해 패러다임 전환기에 도달했다고 지적

* Global Survey on Crypto and Web 3, 2023.06

▶ 웹3 낮은 인지도 불구하고, 기본 개념 공감대 폭넓게 존재...사용자(User)에서 빌더(Builder)로 개념 변화 필요

- 조사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등 15개국* 18~65세의 15,158명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암호자산, 웹3, 데이터 프라이버시, 데이터 소유권 등에 대한 인식·의견·행동 등을 분석
 - * 미국, 아르헨티나, 브라질,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멕시코,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한국, 필리핀, 영국, 미국, 베트남이 포함됨
- 전 세계 응답자 92%가 암호화폐에 대해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웹3는 24%만이 알고 있으며*, 8%만이 친숙하다고 답해 불가분 관계에 있는 두 기술에 대해 사용자 인식은 단절된 것으로 나타남
 - * 사용자는 암호화폐는 잘 알지만, 중앙집중식 거래와 자체 보관(Self-Custody)에 대한 이해는 얕은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응답자들은 데이터와 신원을 더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콘텐츠를 독점한 플랫폼 기업과의 수익 공유에 강한 열망을 보여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웹3 개념*에 대한 폭넓은 저변이 존재한다고 평가
 - * 보고서는 웹 3를 사용자가 자신의 데이터를 소유하고 제어하는 사용자 중심 웹을 구현하기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사용하는 3세대 인터넷 서비스로 정의하고, 스마트 계약, 탈중앙화 금융, 탈중앙화 앱을 이용해 더 안전하고, 더 프라이빗하고, 개방적인 인터넷을 제공한다고 정의
- 관련 업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웹 소유권, 신원, 개인정보보호, 창작 수익 창출과 연관된 문제 해결을 위해 사용자(User) 개념에서 탈피해 빌더(Builder)로 전환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고 평가

[주요국 암호화폐 인지도와 인지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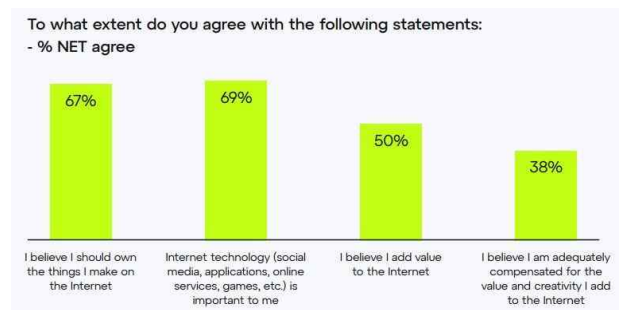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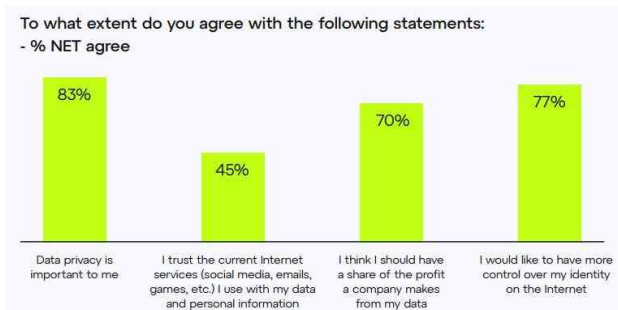
출처 : Consensys, Global Survey on Crypto and Web 3, 2023.06

- 브라질, 필리핀 등은 암호화폐 인지도가 100%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고, 일본이 80%로 낮은 인지도를 보였고, 암호화폐를 화폐의 미래(37%), 디지털 소유권 미래(31%) 등의 개념으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남
- 암호화폐를 사기(26%), 투기(25%)로 여기는 비중은 긍정적 평가보다 상대적으로 낮았지만, 국가·지역별 편차가 심하게 나타남

▶ 사용자, 신원·소유권에 대한 더 큰 권한,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콘텐츠 수익 공유를 희망...웹3와 일맥상통

- **(프라이버시 인식)** 응답자 83%는 데이터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고 답했고, 70%가 플랫폼이 데이터로 얻은 이익을 공유해야 하며, 79%는 자신의 온라인 신원 통제 권한 확대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현 인터넷 서비스(소셜미디어, 게임, 이메일 등)의 데이터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신뢰한다는 비중은 45%로 절반 이하로 나타남
- **(가치 창출)** 응답자 50%는 자신이 인터넷에서 가치를 창출*한다고 여기며, 67%는 인터넷에서 생성한 콘텐츠를 사용자가 소유해야 하며, 38%가 자신의 기여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받는다고 인식
* 나이지리아 응답자 67%는 자신이 인터넷의 가치를 높인다고 인식하지만, 일본 응답자는 5%만이 인식
- 전 세계 응답자들은 인터넷에서 자신의 신원과 소유권에 대한 더 큰 권한 보유를 원하며, 플랫폼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에 대한 더 강력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수익 공유를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인터넷 프라이버시 보호 및 가치 창출에 대한 인식]



출처 : Consensys, Global Survey on Crypto and Web 3, 2023.06

▶ 유럽·한·일, 암호화폐에 회의적, 사기·투기로 인식...동남아시아·남미, 화폐의 미래 등으로 긍정적 수용

- **(암호화폐 인식)** 암호화폐에 대한 지역별 차이가 크게 나타나 유럽, 일본, 한국 등은 암호화폐에 대해 회의적 반응이 높으며, 암호화폐를 사기, 자금세탁, 투기 등 부정적 개념과 연관시키는 경향이 강함
- 암호화폐 사기에 대한 우려가 영국(20%)과 미국(19%) 응답자들은 한국과 일본(각각 12%)보다 더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대부분 국가는 암호화폐와 웹3에 대해 적극적인 반응을 보이며, 화폐의 미래, 디지털 소유권, 기존 금융시스템 혁신 등의 개념과 연관된다고 인식
- 아르헨티나, 나이지리아 등 현지 통화가 불안정한 국가들은 암호화폐가 인플레이션 위험을 회피하고 글로벌 자본과 연결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여김

- 암호화폐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역시 큰 격차를 보여 동남아시아(필리핀,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남미, 아프리카 국가는 암호화폐를 환경친화적 기술로 여기며 특히 비트코인을 긍정적으로 평가
- 하지만, 미국, 유럽, 한국, 일본은 암호화폐가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며 앞으로도 부정적일 것으로 여기는 비중이 높아 회의적으로 평가
- 전 세계 응답자 2/3가 '22년 암호화폐 거래소 파산으로 인한 산업 위기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일본은 25%만이 들어봤다고 응답했고, 거의 모든 국가에서 FTX와 셀시우스를 탈중앙화 거래소로 잘못 인지함*
* 미국, 인도 응답자가 FTX와 셀시우스를 중앙화 거래소로 정확히 인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14%에 불과함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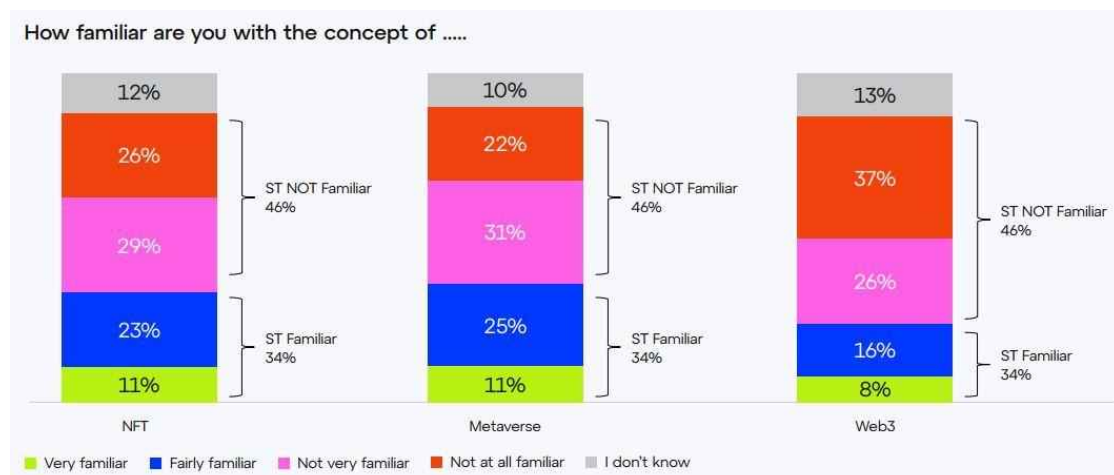


출처 : Consensys, Global Survey on Crypto and Web 3, 2023.06 / 푸른색 : 가장 높은 국가, 붉은색 : 가장 낮은 국가

▶ 메타버스 및 NFT, 웹3보다 높은 인지도 확보...웹3, 거래·윌렛·블록체인 게임 등에서 제한적 사용

- (NFT, 메타버스, 웹 3 인식) 응답자들은 블록체인에 대한 높은 인지를 바탕으로 관련 개념도 익숙하며, 메타버스(36%)와 NFT(34%)가 상대적으로 높고, 웹 3(24%)가 가장 인지도가 낮음

[NFT, 메타버스, 웹 3에 대한 인식 비교]



출처 : Consensys, Global Survey on Crypto and Web 3, 2023.06

- (메타버스) 미국, 인도, 한국,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등이 메타버스에 가장 친숙한 국가로 나타났고, 반면, 유럽, 남미, 일본은 인지도가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남

- **(NFT)** 미국, 인도, 남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베트남 등이 친숙한 국가로 나타났고, 남미, 유럽, 일본 등의 응답자는 생소하다는 비중이 가장 높음
- NFT 개념에 익숙하더라도 영국 응답자 76%는 NFT를 소유한 적이 없다고 답했지만, 베트남 응답자는 24%만이 소유한 적이 없다고 응답
- **(웹 3)** 전 세계적으로 가장 생소한 개념으로 나타났고, 나이지리아와 베트남에서 가장 높은 인지도를 보였고, 유럽과 일본은 매우 낮은 인지를 보임
- 웹3 사용자를 대상으로 1년간 웹 3 활동을 조사한 결과, 거래(33%) 비중이 가장 높고, 웹3 월렛 사용, 스테이킹이 각각 27%로 나타났고, 분산형 소셜미디어 플랫폼 사용, 블록체인 게임 등이 뒤를 이음

▶ **기업 투명성과 책임성 향상, 시장 신뢰 확보를 위한 1순위 조건...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 등 제시**

- 전 세계 응답자는 암호화폐와 웹3 신뢰 확보를 위해서는 암호화폐 기업의 투명성 확보와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답했고, 업계의 부정행위 및 사기에 대해 처벌 강화 등이 뒤를 이음
- 암호화폐 기업의 책임성 강화는 아시아 국가 비중이 높았고, 특히 일본과 인도네시아가 중요하게 파악
- 반면,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는 위험과 모범 사례에 대한 사용자 교육과 커뮤니케이션이 중요하다고 답했고, 한국과 베트남은 규제 기관의 규제 및 감독 강화 선택 비중이 높음

[NFT, 메타버스, 웹 3에 대한 인식 비교]



출처 : Consensys, Global Survey on Crypto and Web 3, 2023.06

- 전 세계 암호화폐 및 웹3 인식조사에서 응답자 92%가 암호화폐를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웹 3는 24%만이 인지하며, 8%만이 친숙하다고 답해 두 기술에 대해 사용자 인식이 단절된 것으로 나타남
- 하지만, 웹 3는 낮은 인지도에도 불구하고, 데이터와 신원 보호, 프라이버시 등에서 폭넓은 사용자 수요가 존재해 '사용자'에서 '빌더'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통한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지적이 제기

[출처]

- Consensys, 'The State of Web3 perception around the world', 2023.06.28.
- Decrypt, 'Survey Says: Nobody Knows What Web3 Is', 2023.06.2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EU, 은행의 암호화폐 자본규정 합의...은행의 시장진출 메리트 차단

- 암호자산 정의 누락·은행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 전면 조정 등으로 난항 끝 합의 도달
- 은행에 암호화 자산 보유에 상응하는 자기 자본 보유 명시, 시장진출 메리트를 차단한다는 평가

EU가 은행이 암호화폐를 보유할 경우 보유한 암호화폐 가치에 해당하는 자기 자본 보유 등을 명시한 은행의 암호화폐 자본요건 규정과 지침 변경 사항에 대해 합의했다고 발표

▶ **은행에 암호화 자산 보유에 상응하는 자기 자본 보유 명시, 시장진출 메리트를 차단한다는 평가**

- 새 규정은 암호화폐의 불안정성이 금융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21년 처음 제안됐고, 그동안 유럽의회, EU 집행위원회, 각국 정부 간 오랜 논의를 거쳐 합의에 도달
- 합의를 주도해 온 유럽의회 경제통상위원회(Economic and Monetary Affairs Committee)는 이번 협정 체결은 EU 은행의 강도와 탄력성을 높이고 암호자산에 대한 잠재적 위험 해소를 위한 조치라고 강조
- 그동안 새 규정은 암호자산에 대한 정의가 빠져 있어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지적과 함께 은행의 기업 대출 등 자산에 대한 위험 가중치 평가 조정이 필요해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힘
- 또한, 은행이 1유로 암호화폐를 보유할 때마다 1유로의 자기 자본을 보유하도록 규정해 은행의 암호화폐 시장진출 메리트를 제거함
- 위원회는 협정에 '암호화 자산에 대한 과도기적 건전성 체계(transitional prudential regime for crypto assets)가 포함됐다고 밝혔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 바젤은행감독위원회가 유동성 암호화폐에 최대 1,250% 위험 가중치 부과를 제시한 상황에서, 이번 EU 협정 체결은 EU 은행의 암호화폐 취급 및 시장진출을 더욱 강력하게 제약할 전망이다*
* 반면, 비공개 회담에서 EU 각국 정부 요청으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강도는 다소 완화된 것으로 알려짐
- 새 규정은 EU 이사회 회원국과 EU의회 투표를 거쳐 입법이 마무리될 예정이며, 바젤위원회의 새로운 은행 규칙에 맞춰 '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

- EU가 은행의 암호화폐 보유에 대한 자본요건 규정과 위험 가중치 등을 조정하는 새로운 규정에 대해 최종 합의했다고 발표하고, 은행의 강도와 탄력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강조
- 새로운 규정은 은행에 암호화폐 보유에 따른 자기 자본 보유를 요구해 은행의 시장진출 메리트를 차단하며, 바젤위원회의 1,250% 위험 가중치와 함께 은행의 암호화폐 활동을 크게 제약할 전망

[출처]

- Decrypt, 'EU Reaches Agreement on Crypto Asset Regulations in Banking', 2023.06.29.
- Coindesk, 'EU Seals Deal on Crypto Bank-Capital Rules', 2023.06.2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코인베이스, SEC 제소에 답변서 조기 제출...창의적 방어 전략 평가

- 12개 암호화폐는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 증권이더라도 SEC 절차 위반과 관할권 남용으로 소송 무효를 주장
- 코인베이스, 시한보다 40일 일찍 답변서 제출...SEC 답변·청문회 일정도 대폭 앞당겨져 창의적 전략 평가

코인베이스가 SEC가 제기한 소송에 대해 규제 당국이 정당한 절차를 위반하고, 관할권을 넘어서었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제출했고, 법정 시한을 40일가량 앞당겨 신속한 재판을 위한 창의적 접근이라는 평가를 받음

▶ 제출 시한보다 40일 일찍 답변서 제출...SEC 답변·청문회 일정도 대폭 앞당겨져 창의적 전략으로 평가

- 미국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SEC의 소송의 첫 번째 법적 대응에서 코인베이스 플랫폼에 상장된 디지털 자산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권한 밖에 있다고 주장
- 코인베이스는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코인베이스 플랫폼과 월렛에서 제공하는 12개 암호화폐가 미등록 증권이라는 주장을 부인하고, 해당 암호화폐는 투자 계약이 아니므로 증권이 아니라고 강조
- 코인베이스는 거래소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암호화폐는 계약에 따른 자산 판매 계약이 아니므로 토큰 발행자는 투자자에게 아무런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하우이(Howey) 사건을 사례로 제시
- 또한, 2차 시장 거래소를 통한 거래에서 구매자가 획득하는 가치는 토큰 발행자가 생성한 것이 아니라, 구매 또는 거래된 상품에 내재된 것이라고 주장
- 답변서에서 코인베이스는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21년 4월 취임 이후 규제 당국의 암호화폐 규제 권한 입장을 번복했다고 지적하고, 코인베이스는 지속적으로 규제 적용을 요청했다고 강조
- 코인베이스는 설사, SEC가 지목한 12개 암호화폐가 규제 당국 권한에 포함된다고 하더라도, SEC 조치는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관할권을 남용했기 때문에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 코인베이스의 답변서는 제출 시한인 '23년 8월 7일보다 40일 일찍 제출했고, 규정에 따라 SEC 답변 제출 시한도 7월 13일로 앞당겨짐
- 업계는 입장이 불분명한 SEC를 상대로 코인베이스가 창의적인 방어 전략을 사용했다고 평가

- 코인베이스가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SEC가 지목한 12개 암호화폐는 하우이 사건 등을 통해 고려할 때 증권이 아니며, 오히려 SEC가 법적 절차 및 관할권 남용으로 소송이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
- 코인베이스는 답변서를 제출 시한보다 40일가량 일찍 제출했고, 이에 따라 SEC 답변과 청문회 일정이 대폭 앞당겨졌고, 업계는 코인베이스가 창의적인 방어 전략을 사용했다고 평가

[출처]

- Coindesk, 'SEC Has No Jurisdiction Over Cryptos on Coinbase, Exchange Says in Lawsuit Response' 2023.06.29.
- Coindesk, 'SEC vs Coinbase Case Set for July 13 After Exchange's 'Creative' Opening Response' 2023.06.3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코인베이스의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 보안 검사 통해 안전 강조

-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 베이스, 외부 보안 감사 진행...보안 및 기술 검증 통해 생태계 구축 추진
- 수수료 기반 BM 탈피를 위한 전략 제품, 온체인 제품의 핵심 서비스로 올해 출시 예정

코인베이스가 향후 온체인 제품의 핵심 서비스로 개발 중인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의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외부 전문가의 보안 감사를 진행하고 광범위한 기술 안정성 검증을 강조

▶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Base) 외부 보안 감사 진행...보안 및 기술 검증 통해 생태계 구축 착수

-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Base)의 메인넷 출시를 앞두고, 100명 이상의 외부 전문가를 통해 보안 감사를 진행해 네트워크 아키텍처의 광범위한 안정성을 확인했다고 발표
 - * 레이어 2 솔루션은 이더리움 등의 트랜잭션을 다른 공간에서 처리한 후 결과를 해당 네트워크에 다시 전달하는 방식으로 트랜잭션을 더 저렴하고 효율적으로 처리
- 코드포레나*를 통해 진행된 이번 보안 감사는 14일 동안 네트워크의 스마트 계약, 브리지 및 기타 영역의 취약점 발견 등을 목표로 진행했고, 별다른 문제나 버그가 발견되지 않음
 - * Code4rena : 클라우드 소싱으로 전문가들을 모아 감사를 진행하고, 버그 바운티(취약점 보상 프로그램)를 제공
- 코인베이스는 베이스에 대한 모든 결과물을 검토해 유익하거나 사소한 문제 해결에 주력한다고 발표
- 코인베이스 레이어 2 네트워크는 이더리움 확장을 위해 옵티미스틱 롤업* 전문기업 옵티미즘(Optimism)과 공동개발 중이며, 옵티미즘 OP 스택을 이용해 올해 중 출시할 방침
 - * Optimistic Rollups : 여러 트랜잭션을 하나의 트랜잭션으로 '롤업'해 다른 블록체인에서 정산하고 영수증을 메인 이더리움 블록체인으로 피드백하는 방식
- 코인베이스 이번 보안 감사를 통해 보안 우려가 해소됐다고 주장하고, 현재 내부적으로 스마트 계약 결함 여부를 스캔하는 도구와 네트워크 불규칙성 모니터링 도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개
- 코인베이스는 기존 거래 수수료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점차 스테이킹, 구독 등 서비스 확충을 통한 수익 다각화에 나서고 있으며, 베이스를 향후 온체인 제품의 서비스 기반으로 활용할 방침
- 지난 2월 베이스를 첫 공개하고, 3월에는 베이스를 기반으로 한 월렛 서비스를 발표함

- 코인베이스가 이더리움 레이어 2 네트워크인 베이스의 보안 감사를 통해 광범위한 보안을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스마트 계약 결함 스캔 도구와 불규칙성 모니터링 도구 등을 개발하고 있다고 공개
- 베이스는 서비스 및 수익 다각화를 위한 핵심 제품으로 옵티미스틱 롤업을 통해 이더리움 확장성을 제공하며, 지난 2월 첫 공개에 이어 월렛 서비스 개발 등이 추진되고 있음

[출처]

- Decrypt, 'Coinbase's Ethereum Layer-2 Network Base Preps for Mainnet Launch' 2023.06.30.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IMF, 암호화폐 과세 대책 마련 시급..AML만으로 탈세 방지 역부족
2. 글로벌 공공 블록체인 시장, '32년 2,186억 달러..연평균 56.8% 성장
3. SEC, 코인베이스가 소송 전에 법 위반 사실 인지 주장
4. 싱가포르·태국, DPT 스테이킹 금지..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도입
5. 바이낸스, 미래 거점으로 UAE 주목..親 산업정책과 풍부한 인력 활용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IMF, 암호화폐 과세 대책 마련 시급...AML만으로 탈세 방지 역부족

- 암호화폐 익명성·이중성이 과세 어려움 초래...암호자산 열풍에도 과세 부문 외면으로 경험·분석 부족
- 암호화폐 과세, AML 및 제3자 보고 요건 적용이 현실적 대안...장기적으로 블록체인 투명성 활용을 제안

국제통화기금(IMF)이 자금세탁방지(AML) 규정만으로는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탈세 방지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전 세계적인 합의가 없어 수백억 달러의 잠재적 세수가 위험에 처했다고 경고

▶ 디지털자산, 과세 당국 회피를 위한 강력한 방법을 제공...AML 및 제3자 보고 요건 적용이 현실적 대안

- IMF 재정국이 암호화폐 과세 보고서*를 발표하고, 자금세탁방지(AML) 규정은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세금 탈루자와 범죄자를 다루는 논리적 출발점이지만, 완전무결한 처방은 아니라고 지적
 - * Taxing Cryptocurrencies, 2023.07
- 과세 측면에서 디지털자산은 범죄자나 일부 부유층에 과세 당국의 눈을 피해 거래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롭고 강력한 방법을 제공하며,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글로벌 표준으로 AML 규정이 존재하지만, 모든 관할권이 이를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
- 전 세계적으로 암호화폐 과세에 대한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수백억 달러의 잠재적 세수가 위험에 처했다고 지적하고, 현실적 대안에 대한 국제 협력이 필요한 시급한 사안이라고 강조
- IMF는 암호화폐의 익명성과 상관없이 과세시스템은 암호화폐를 포괄해야 하고, 과세 당국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 대안은 AML 규정과 제3자 보고* 요건의 적용이라고 제안
 - * Third party reporting : 피해자가 아닌 제3자여도 범죄를 신고할 수 있고, 범죄를 직접 신고하고 싶지 않은 피해자도 이를 통해 범죄 신고 접수가 가능
- IMF는 '21년 기준 암호화폐 거래에 20%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경우, 3,000억 달러의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추정하고, AML과 고객 알기 제도(KYC)만으로는 이러한 액수의 세금부과가 불가능하다고 평가
- KYC 규정을 통해 어떤 개인이 특정 금액의 암호화폐를 현금화했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지만, 블록체인에 기록된 그 이전 거래에서 추가 정보 없이는 자본 소득이나 손실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

▶ IMF, 암호화폐 과세에 블록체인 투명성 활용을 강조...온체인 공개 정보에 대한 AI 활용도 제안

- IMF는 암호화폐 거래를 뒷받침하는 블록체인은 거래 내역에 담긴 정보를 놀라운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개한다고 강조하고, 과세 당국은 블록체인 기술을 과세에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
- 또한, 암호화폐 거래소와 같은 중앙집중화된 조직은 과세 당국이 디지털 자산 소유권에 대한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거래소는 현금이 암호화폐로 교환되는 점점 역할을 제공하며, 교환 이후 활동도 추적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강조

- IMF는 인공 지능이 온체인에서 발생하는 '잠재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행동 식별'에 어느 정도 사용될 수 있고, 네트워크에 공개된 방대한 정보가 포렌식 분석에 적합하다고 강조
- 이러한 대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거래는 디지털 월렛에 개인 이름을 연결하지 않으면, 당사자가 직접 공개하지 않는 한 누구 소유인지 알 수 없는 익명성 문제가 남는다고 설명
- IMF는 익명성 극복이 현 과제 당국이 해결해야 할 핵심이라고 강조하고, 과거에는 사용자 신원은 알지만, 소득은 모르는 것이 문제였지만, 현재는 소득은 알지만, 사용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

▶ 암호화폐의 익명성, 이중성이 과세 어려움을 초래...암호자산 열풍에도 과세 부문은 외면해 경험·분석 부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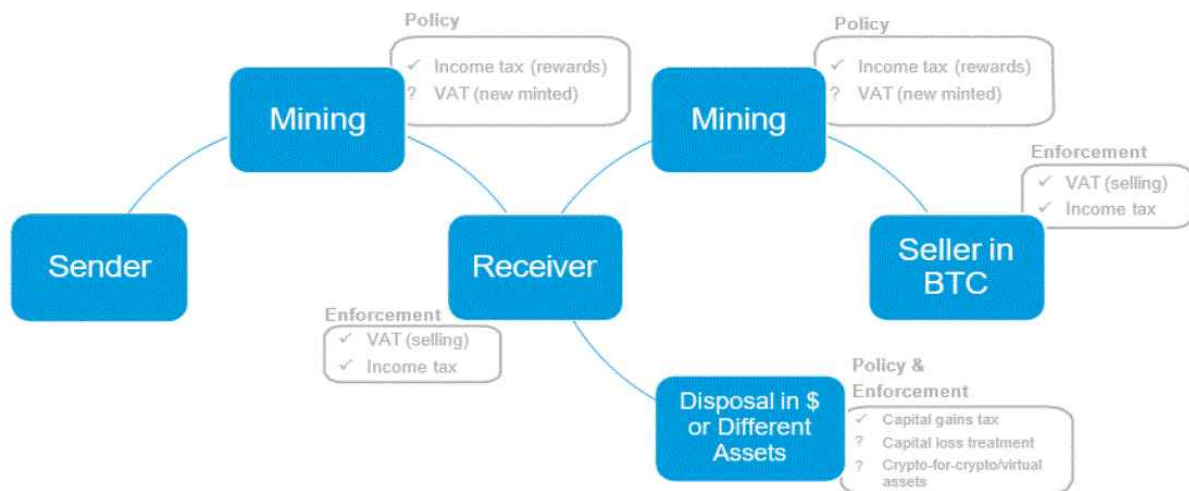
- 각국 과세 당국은 기존 세금 시스템에서 배제된 암호자산* 처리에 집중하지만, ▲암호자산 익명성 ▲투자 자산과 결제 수단으로서 암호자산 이중성** 등의 문제가 과세 복잡성을 높인다고 지적
- * crypto asset : 보고서는 암호자산을 분산원장에 의존해 거래를 검증하고 보호하는 디지털 가치 표현으로 정의
- ** 암호자산은 투자 자산으로서 금융 및 기타 자산의 증권 토큰과 NFT가 존재하며, 다른 한편에 디지털 형태의 명목화폐인 CBDC가 존재
- 암호자산이 크게 활성화된 이후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지만, 과세 부문은 관심을 거의 받지 못해 축적된 경험이나 분석이 부족하다고 지적
- 암호자산 중 NFT는 개념적으로 자연스레 투자 자산으로 취급되고, CBDC는 디지털 형태의 명목화폐일 뿐이라 기존 과세시스템 처리에서 어려움이 없음
- 하지만, 가장 대중적인 암호자산인 암호화폐는 잠재적으로 투자 및 결제 기능을 모두 제공하고, 비공개로 발행되어 과세 당국의 분류와 집행이 매우 어려움
- 개념적으로 암호화폐는 투자 자산인 동시에 결제 자산인 이중적 특성을 가졌고, 현재는 투자 자산 측면이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결제 자산 특성은 암호화폐 개발의 본래 목적으로 매우 큰 잠재력을 보유
- 이러한 암호화폐 이중성은 과세 설계 및 구현을 복잡하게 하고, 월렛과 키를 통한 통제권 행사와 비공개 주소를 통한 거래로 인한 준 익명성(quasi-anonymous)은 과세 난이도를 크게 높임
- 하지만, 암호화폐는 현금과 달리 매우 투명한 성격을 가진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
- 암호화폐 거래 정보에서 개인 주소 복구는 얼핏 보면 불가능해 보이지만, IP 주소 추적이 사실상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고, 이를 통해 불법 거래 자금 추적 등이 가능하다고 지적
- * VPN을 통해 숨길 수 있고 실 소유권에 대한 제한된 단서만 확보 가능

▶ 암호화폐 세금설계, 소득세 중심 접근 진행..재산 vs 통화의 암호화폐 분류가 과세 설계 출발점

- 현재 암호화폐 과세는 소득세(Income Taxation)를 주요 고려 대상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에 대한 고려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이며, 과세 관련 각국 관행이 매우 다양하고 유동적인 상황
- **(소득세)** 소득세 부과를 위해서 통상 암호화폐를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재산이나 (외국) 통화로 분류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국가마다 분류가 다르지만 둘 간의 차이가 매우 큼*
- * 많은 국가에서 외화 보유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함

-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며, 이 경우 링-펜싱 손실*, 면제 금액, 보유 기간 등에 따라 세율 변화 등이 주요 고려사항을 이룸
* ring-fencing of losses : 해당 금액이 다음 해로 이월되며,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과만 상계하는 의미
- 미국의 경우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분류하면, 모든 거래에 대한 자본 이득을 당국에 신고해야 하며, 1년 이상 보유 시 일반 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됨
- 하지만, 암호화폐를 외국 통화로 분류하면 미화 200달러를 초과하는 이익에 대해서만 일반 소득으로 과세가 이뤄짐
- 각국 정부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취급할 경우, 모든 거래에 대해 손익을 계산해야 하고, 이러한 의무는 암호화폐의 일상적 사용과 거래에서 매우 큰 장애물로 작용할 전망

[암호화폐 과세 과정]



출처 : IMF, Taxing Cryptocurrencies, 2023.07

- 최근 영국 등을 중심으로 암호화폐 보유를 도박으로 간주해 도박 관련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접근도 등장했지만, 둘 간의 연관성에 대한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 IMF는 암호화폐의 소득세 부과에서 가장 일반적인 접근은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간주하고, 양도소득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라고 제시
- 그렇지만, 유럽,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 세계 각국이 금융 활성화를 목적으로 금융 자산에서 발생하는 자본 이득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정책을 도입해 암호화폐 과세 역시 다양한 접근*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평가
* 인도의 경우 암호화폐에 대해 전면 허용과 규제 사이에서 중간적 입장을 택해, 암호화폐, NFT 등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30%의 세금을 부과하는 맞춤형 과세 제도를 도입

▶ 암호화폐 급격한 가격 변동을 막기 위한 '암호화폐 거래세' 등장 가능, 탄소세 원천 징수 논의도 진행

- **(VAT 및 판매세)** 암호화폐는 거래 측면에서 보면 대가를 위한 공급이므로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판매세(Sales Taxation) 부과는 큰 논란이 없음

- 호주, 일본,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은 자국 과세 관행을 반영해 암호화폐 취득 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는 면제 규정을 도입했고, 유럽사법재판소도 '15년 암호화폐 취득에 부가가치세를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
- IMF는 채굴자가 받는 수수료와 새로 발행된 암호화폐에 대한 VAT도 명확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
- **(기타)** 암호화폐가 활성화되면, 거시정책의 약화와 이를 통한 국제 통화시스템 안정성 위협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기 위한 세금부과 가능성이 존재하며, 기존 금융 거래세(FTT)*와 비슷한 형태가 예상됨
 * Financial Transactions Taxes: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유형 금융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증권거래세, 통화거래세, 은행거래세 등 세계 각지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임
- 암호화폐의 막대한 에너지 사용에 대한 탄소세를 부과하고, 이를 작업증명 검증 메커니즘 비용으로 원천징수하는 방안도 제기됨

▶ IMF, 암호화폐 과세는 시행이 가장 큰 과제..제3자 보고 요건 강화로 시작해 블록체인 투명성 활용 제안

- IMF는 암호자산이 배제된 현 과세시스템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암호화폐와 관련 혁신을 수용하는 동시에 과세의 효율성, 공정성, 일관성을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
- 하지만, 암호화폐는 태생적으로 중앙 기관을 개입을 배제하며, ▲암호화폐 거래 익명성 ▲투자 자산이자 결제 자산인 이중적 특성 ▲국경을 넘는 관할권 초월 등을 과세 복잡성을 초래하는 주요 요인으로 제시
- IMF는 암호화폐 과세 시행이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고, AML 규정과 제3자 보고 요건 적용을 가장 현실적 출발점으로 삼을 것을 제안
- 궁극적으로 블록체인 내 분산원장 기술의 높은 투명성과 스마트 계약의 자동화 기능을 활용한 원천 징수 및 부가가치세 부과 등의 효과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제안

- IMF가 자금세탁방지 규정은 암호화폐를 악용하는 세금 탈루자와 범죄자를 다루는 논리적 출발점이지만, 완전무결한 처방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AML 규정과 제3자 보고 요건의 적용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
- 향후 암호화폐 과세에 블록체인의 투명성, 스마트 계약의 자동화 기능, 온체인 정보에 대한 AI 활용 등 첨단 기술 활용을 제안

[출처]

- Decrypt, 'Bitcoin Tax Evasion Can't Be Stopped With Just Anti-Money Laundering: IMF Report' 2023.07.07.
- Forbes, 'IMF identifies potential for tens of billions in taxes from crypto assets, provides limited solutions for collection' 2023.07.07.
- Bitcoinist, 'IMF Identifies Crypto As An 'Obstacle' To Tax Collection Systems – Here's Why' 2023.07.0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글로벌 공공 블록체인 시장, '32년 2,186억 달러...연평균 56.8% 성장

- 각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 추진이 최대 성장 동인, 북미 중심에서 아태 지역으로 성장 거점 이동 전망
-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시장이 성장을 견인, 공공 서비스 운영방식과 시민과 소통 방식 변화 촉진

글로벌 공공 블록체인 시장이 '22년 25억 달러 규모에서 '32년 2,186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56.8% 성장하며, 공공 블록체인 도입 확대에 정부의 공공 서비스 운영방식과 시민과의 소통 방식이 변모할 전망

▶ 공공 블록체인 시장, 각국 정부의 블록체인 수요가 급성장 견인...부족한 인식과 인력 부족은 해결과제

- 글로벌 리서치 기업 얼라이드 마켓 리서치(Allied Market Research)가 글로벌 공공 블록체인 시장* 분석 보고서**에서 관련 시장이 '22년 25억 달러에서 '32년 2,186억 달러로 연평균 56.8% 성장세를 전망
 - * 공공 블록체인(Blockchain Government) : 정부 기관 운영 및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시장으로 정의
 - ** Blockchain Government Market by Provider(Application Providers, Middleware Providers, Infrastructure Providers), by Application(Identity Management, Asset Registry, Smart Contracts, Payments, Voting, Others) :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23-2032
- **(성장요인)** 각국 정부가 공공 부문에서 블록체인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추진하는 것이 최대 동인
- 각국 정부는 비즈니스 네트워크 내에서 정보를 투명하게 보관하고 공유하는 정교한 데이터베이스 기술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 공공 서비스 및 시스템 운영 효율성 개선을 꾀함
 - * 팬데믹 이후 정부의 디지털 혁신 노력과 디지털 솔루션 수요가 가속화됐고,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전망
- 특히, 주문·결제·계정 및 기타 거래기록 저장을 위한 불변의 원장 구축에서 블록체인을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받아들여 다양한 파일럿 프로젝트와 테스트*를 진행
 - * 보고서는 덴마크 외교부가 가상화폐 플랫폼 코인 파이(Coinify)와 공동으로 해외 원조 업무에 블록체인을 도입해 제3자 금융 기관 개입 배제를 통한 시간·비용 절약 사례를 성공 사례로 제시
- 각국 정부는 블록체인 도입으로 ▲프로세스 효율화 ▲투명성 향상 ▲보안 강화 ▲공공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 ▲관리 비용 절감 ▲공공 시스템 신뢰 증가 ▲부패 및 남용 가능성 저하 등을 기대
- 또한, 정부의 디지털화 촉진으로 투명하고 분산화된 정부 구현과 데이터 변조 방지를 위한 대책 수립 등에서 블록체인 수요가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저해요인)**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이 성장을 저해하는 최대 요인으로 작용하고, 블록체인 교육에 대한 정규 프로그램 부족으로 숙련된 인력 부족이 성장세를 저해할 것으로 예측
- 블록체인을 도입한 기업 가운데 특히 중소기업은 기술 이해도가 낮아 블록체인 장점을 충분히 구현하지 못하며*, 종종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기술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이 확산됨
 - * 이는 블록체인 업계가 아직까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인 사고방식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
- 많은 관할권에서 블록체인 기술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블록체인은 혁신 활동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 등 규제 프레임워크에 명확한 가이드를 제공해야 함

- 블록체인 기술을 빠르게 진화하지만, 블록체인의 복잡성을 이해하는 인력은 제한적이라 시장 확산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며, 교육 과정 등에서 많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
- 하지만 최근 블록체인 시장에서 기존 개발자 외에 콘텐츠 작가(blockchain content writers)*와 같은 신규 직종이 등장해 새로운 기회 창출과 역동성이 높아지고 있음
 - *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을 지원하는 콘텐츠 작성을 통해 잠재 고객과 블록체인 비즈니스 및 서비스를 연결하며, 이를 통해 잠재 고객의 조사 및 탐색 지원, 교육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
- 블록체인 개발자는 솔리디티(Solidity), C++, 자바스크립트 등 프로그래밍 언어와 하이퍼 레저(Hyperledger), 코다(Corda), 이더리움 블록체인 프레임워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산업 및 분야 전문가로 분화함

[공공 블록체인 시장 성장 동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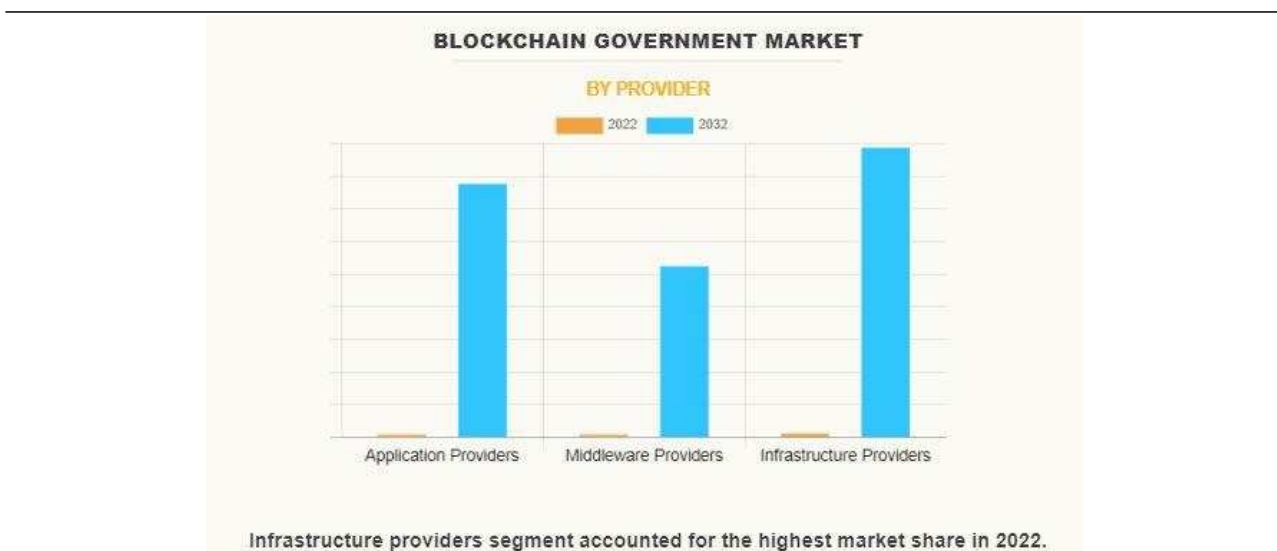
	구분	내용
긍정	각국 정부의 블록체인 도입 관심 증가	정보 투명성 보장과 프로세스 효율화 등을 통한 정부 운영 개선 목적
	데이터 변조 방지 필요성 증대	공공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버넌스 촉진
	투명하고 분산화된 정부 구현	디지털 신원 시스템 도입으로 투명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한 환경 구축
	기술 커리어 경로 증가	콘텐츠 작가 등 신규 직종 등장과 기술별, 산업별 수요가 다양해짐
부정	기술에 대한 인식 부족	암호화폐와 연관되어 기술에 대한 오해와 부정적 인식 확산
	숙련된 전문가 부족	블록체인 교육에 대한 정규 프로그램 미비로 인력 수요가 공급을 초과

출처 : Allied Market Research

▶ 애플리케이션과 인프라 영역이 시장 성장을 주도, 북미 지역에서 아태 지역으로 성장 거점 이동

- 공공 블록체인 시장은 공급자에 따라 ▲애플리케이션 ▲미들웨어 ▲인프라로 구분되며, 애플리케이션은 신원 관리, 자산 등록, 스마트 계약, 결제, 투표, 기타 등으로 구분

[공공 블록체인 시장 성장 전망(분야별)]



출처 : Allied Market Research,

- **(애플리케이션 시장)** 가장 높은 성장세를 통해 최대 시장 형성이 예상되며, 주요 애플리케이션 공급사들이 각국 공공기관과 협력해 맞춤형 솔루션 개발이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

- IBM, SAP, 인포시스, 오라클 등 주요 애플리케이션 공급사는 각국 공공기관과 협력해 기관 고유의 해결과제(Pain Point), 규제 프레임워크, 보안 문제 등을 해결에 나섬
- 각국 정부 역시 적극적인 블록체인 솔루션 탐색과 블록체인 이니셔티브를 추진하며, 이 과정에서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 공급사와 재정지원, 리소스 공유, 파트너십 체결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구축
- **(인프라 시장)**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앞세운 인프라 시장은 확장 가능성과 유연성을 앞세운 인프라 제공을 강조하면서 애플리케이션 시장 성장세를 따라잡을 전망
- 아마존웹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제공하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는 신속한 배포, 온디맨드 확장성, 비용 효율성 등에서 장점을 가지며, 공공기관은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에만 집중하는 환경을 제공
- '22년 공공 블록체인 시장은 북미 지역이 블록체인 기술의 실현 가능성과 다양한 장점 테스트를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와 개념 증명 수행을 통해 최대 시장을 형성
- 하지만, 아태 지역 각국이 다양한 공공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블록체인 기반 신원 시스템 구축*에 나서 새로운 공공 블록체인 시장 중심지로 부상
 - * 블록체인 기반 신원 솔루션은 시민에게 개인 데이터에 대한 통제권을 제공하고, 전자 정부 서비스에 대한 쉬운 액세스를 제공

▶ 데이터 저장 방식 변화, 서비스 운영방식과 소통 방식이 변화...디지털 신원 넘어 블록체인 투표 관심 증대

- 공공 블록체인 도입 확대로 정부의 공공 서비스 운영방식과 시민과의 소통 방식이 변모
- **(디지털 신원)** 블록체인 보안을 이용해 시민 신원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관리하며, 이와 동시에 신원 도용과 사기를 줄여가며, 시민은 자기 데이터 통제권 확대와 함께 공공 서비스의 접속과 사용이 원활해짐
- 호주 정부는 IBM과 협력해 여권과 출생증명서 데이터베이스를 블록체인 기반 1개 시스템으로 통합했고, 두바이 정부는 사법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술로 전환함
- **(신뢰 거버넌스 구축)** 투명성 확보를 통한 데이터 변조 방지는 공공 프로세스에 대한 신뢰를 강화해 책임감 있고 믿을 수 있는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을 촉진
- 블록체인 투표 시스템은 블록체인의 불변성과 투명성을 이용해 선거 사기 제거, 유권자 신뢰 제고, 전체 투표 과정 간소화, 시간 개표와 감사를 통해 조작이 불가능한 신뢰성과 투명성을 보장

- 글로벌 공공 블록체인 시장이 '22년 25억 달러에서 '32년 2,186억 달러로 연평균 56.8% 성장하며, 각국 정부의 디지털 혁신 추진이 시장 확산의 최대 동인이 될 전망
- 맞춤형 블록체인 솔루션 수요와 확장 가능한 블록체인 인프라 수요가 시장 성장을 견인하며, 이를 통해 정부의 공공 서비스 운영방식과 시민과의 소통 방식이 변모할 것으로 예측

[출처]

- Alliedmarketresearch, 'Global Opportunity Analysis and Industry Forecast, 2023-2032', 2023.07.05.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SEC, 코인베이스가 소송 전에 법 위반 사실 인지 주장

- 코인베이스가 내부 문서에서 투자자에 유가증권 간주 가능성 명기하고 잠재적 위험을 경고했다고 지적
 - SEC, 코인베이스의 2가지 핵심 주장을 LBRY* 사례 들어 적극 반박...법원에 SEC 주장의 기각을 요청
- * LBRY는 블록체인 기반 파일 공유 및 결제 네트워크로, '21년 3월 SEC로부터 증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됐고, '22년 11월 법원은 LBRY가 자금조달 등록 없이 미등록 증권을 판매했다는 SEC 주장을 수용

미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가 피소 전부터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규제 불투명성을 강조하는 코인베이스 주장을 강하게 반박

▶ SEC, 코인베이스의 2가지 핵심 주장을 LBRY 사례 들어 적극 반박...법원에 SEC 주장의 기각을 요청

- 코인베이스는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SEC의 규제 권한 밖이라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23.06.29)해 소송 방어에 나섰고, 이에 대해 SEC는 코인베이스가 피소 전부터 법 위반 가능성을 알고 있었다고 주장
- SEC는 법원 제출 문서에서 코인베이스가 수년 전 연방 증권법이 자사 상장에 적용될 가능성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향후 코인베이스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판결 신청에 반대할 방침이라고 강조
- SEC는 코인베이스가 정교한 법률 자문이 제공되는 대형 기업으로서, 자사 행위의 증권법 위반 가능성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21년 SEC의 등록 승인으로 비즈니스 합법성을 인정받았다고 강조한다고 비난
- 또한, SEC는 코인베이스가 특정 암호화폐가 증권법 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대법원 법률 프레임워크를 채택했지만, 암호화폐 발행자에게 전통 증권과 관련된 일체의 언급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고 주장
- SEC는 코인베이스가 이미 공식 문서에서 투자자에게 상장 자산이 유가증권으로 간주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고, 잠재적 위험 중 하나라고 강조한다고 지적
- 이상을 통해 코인베이스는 자사 사업 모델에 증권법이 적용될 수 있고, 적법성 평가에서 어떤 규칙을 고려해야 함을 알고 있었지만, 비즈니스 성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결정을 했다고 주장
- SEC는 코인베이스가 ▲투자 계약에는 계약서가 필요하고 ▲2차 시장 투자 거래는 자산 판매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SEC는 최근 승소 사례(LBRY)를 들어 모두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

- SEC가 코인베이스 증권법 위반 소송에서 코인베이스의 규제 권한 밖이라는 주장에 대해, 코인베이스가 피소 전부터 연방 증권법의 위반 가능성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반박에 나섬
- SEC는 코인베이스가 각종 사례에서 증권법 위반 가능성을 인지했지만, 성과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고, 주요 질문원칙과 우려 사항을 위반했다는 코인베이스 주장의 기각을 요청

[출처]

- Coindesk, 'Coinbase Knew It May Have Been Violating the Law Prior to the SEC's Lawsuit, Regulator Claims', 2023.07.0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아시아]

싱가포르·태국, DPT 스테이킹 금지...소비자 보호 중심의 규제 도입

- 양국, 디지털 결제 토큰의 대출과 스테이킹 서비스 금지...거래위험을 분명하게 알리는 '위험 고지' 강화
- '22년 FTX 파산과 유사한 재발 방지에 집중, 연말까지 고객 자산을 분리 및 신탁 의무화 요구

싱가포르와 태국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소비자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가장 먼저 DPT 대출과 스테이킹 서비스를 주요 단속대상으로 삼아 각국 규제 당국 관심이 집중

▶ 양국, 디지털 결제 토큰의 대출과 스테이킹 서비스 금지...거래위험을 분명하게 알리는 '위험 고지' 강화

- **(싱가포르)**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디지털 결제 토큰(DPT) 서비스 제공기업의 소매 고객을 상대로 한 DPT 토큰 대출과 스테이킹 행위를 제한한다고 발표
- MAS는 해당 규제를 공식 발표하지 않고, 백서를 통해 규제 개요를 설명
- MAS는 백서에서 스테이킹 대출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직접 목격했다고 강조하고, DPT 업체의 내부적 이해 상충이 존재한다고 지적
- MAS는 소매 고객의 자산이 대여되거나 스테이킹 되면, 대부분 소매 고객의 소유가 아니거나 통제되지 않으며, DPT 제공기업에 부여되는 분리 및 수탁 요건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고 강조
- MAS는 DPT 기업 자금과 고객자금 혼용을 막기 위해 연말까지 고객 자산의 신탁 이전을 요구하고, 개별 고객의 자산은 통합 풀에 섞일 수 있지만, 해당 풀은 제공기업의 자산과 분리되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
- **(태국)**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월 30일부터 일반인을 상대로 한 예금 수탁 및 스테이킹 서비스를 금지한다고 발표해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스테이킹 규제에 나섬
- 태국 SEC는 예금자와 대출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예치 서비스(depositary services)'에 적용된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거래소를 상대로 대출과 스테이킹 서비스 제공을 전면 금지
- 태국 SEC는 거래 관련 위험을 명확히 표시하는 거래위험 고지 제도를 의무 도입하고, 소비자에게 암호화폐 거래 고위험성과 손실 가능성을 서비스 이용 전에 명확하게 볼 수 있는 조치

- 싱가포르와 태국이 암호화폐 규제에서 소비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디지털 결제토큰 대출과 스테이킹을 금지하는 규제를 도입했고, 암호화폐 관련 위험에 대해 소비자에게 더 많은 정보 제공을 요구
- 양국 규제는 거래소의 대출과 스테이킹 서비스를 전면 금지하고, 고객 자산 분리를 강하게 요구한다는 점에서 '22년 FTX 파산과 유사한 사고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췄다는 분석

[출처]

- Blockworks,, 'Singapore and Thailand crack down on crypto staking' 2023.07.0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바이낸스, 미래 거점으로 UAE 주목..親 산업정책과 풍부한 인력 활용

- 바이낸스, 미국·독일·프랑스 등에서 운영 어려움 증가... '22년부터 UAE 주목해 적극적인 투자 진행
- UAE, 가상자산 육성 정책으로 전 세계 인력 유입...사회가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모해 혁신에 적합 평가

바이낸스가 미국을 비롯한 독일, 프랑스 등에서 각국 규제 당국의 집행조치 강화로 운영에 어려움이 커진 가운데, UAE를 향후 운영거점으로 삼아 비즈니스 확산에 나섰다는 분석

▶ **UAE의 가상자산 육성 정책으로 전 세계 인력 유입...사회가 젊어지고 역동적으로 변모해 혁신에 적합 평가**

- 바이낸스는 미 SEC 제소(6.5)를 비롯해 네덜란드 철수(6.16), 프랑스 당국의 자금세탁 조사(6.16), 벨기에 당국의 서비스 중단 명령(6.24), 독일 당국의 커스터디 라이선스 발급 거부(6.29) 등으로 어려움을 겪음
- 업계는 바이낸스가 새로운 암호화폐 허브로 부상하는 UAE를 미래 운영거점으로 주목한다고 평가
- 바이낸스 두바이 알렉스 체하데(Alex Chehade) 총괄 매니저는 UAE의 가상자산 친화적 환경을 강조하고, 바이낸스의 암호화폐 비즈니스 미래에서 UAE가 주요 목적지라고 평가해 신규 거점 분석을 인정
- 체하데 매니저는 UAE 지도부가 웹3와 암호화폐를 원동력으로 삼아 화석 연료에서 벗어난 산업 다각화와 새로운 금융 거점으로서의 부각 의지를 확인했다고 강조하고, 바이낸스에 매우 매력적이라고 강조
- 바이낸스는 UAE에서 사업을 시작하고, 미래를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는 확신을 얻어 UAE 시장진출 및 투자를 적극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
- * 바이낸스는 VARA로부터 규제 프레임워크가 발표('23.02)되기 전인, '22년 9월 최소기능제품 예비 라이선스를 획득
- 바이낸스는 암호화 시장에서 UAE 부각은 가상자산 규제 당국(VARA)이 주요 원동력이 됐다고 평가하고, 이 때문에 규제 프레임워크의 명확성과 세계 각지의 암호자산 인력 유입이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
- 런던 등 다른 암호자산 허브와 달리 UAE는 전체 인구가 젊어지고 있어 사회 역동성이 커지고 가상자산에 대한 호의적인 사고방식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강조
- 업계는 UAE 암호화폐 생태계가 아직 초기 단계라 민간 및 규제 기관과 상호작용이 활발하고, 글로벌 개발자로 100여 명 이상의 팀을 꾸리기가 매우 쉽다고 글로벌 암호화폐 기업의 관심이 집중된다고 평가

- 바이낸스가 세계 각국 규제 당국의 집행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가상자산 산업 육성에 적극적으로 나선 UAE를 새로운 미래 운영거점으로 삼아 관련 투자를 늘려갈 방침
- 업계는 UAE가 산업 친화적 육성 정책으로 전 세계 암호화폐 인력이 몰려들어, 전체 인구가 젊어져 사회가 더욱 역동적이고 가상자산 친화적으로 변모하고 있다고 평가

[출처]

- Cointelegraph, 'Binance eyes United Arab Emirates as 'focal point' for future operations' 2023.06.26.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EBA-ESMA, MiCA 첫 세부 지침 공개...규제 표준 조기 채택 강조
2. BIS, '22 서베이 결과 공개...CBDC 도입 급증+스테이블코인 위험 고조
3. 서클 CEO, "스테이블코인 입법 없으면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 위태"
4. 스테이킹 이더리움, 450억 달러로 전체 공급량 20% 도달
5. 美 SEC vs 코인베이스 소송, 첫 심리 진행..SEC 주장에 회의적 평가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EU]

EBA·ESMA, MiCA 첫 세부 지침 공개...규제 표준 조기 채택 강조

- EBA,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MiCA 사전 준수 촉구...ESMA, 자산서비스 기업 관련 기술 표준 제시
- 암호자산에 대한 높은 규제 원칙을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전환 평가, '23년 10월 2번째 제안 공개 예정

EU 규제 당국인 EBA와 ESMA가 MiCA 도입 최종 승인 이후 첫 번째 세부 지침을 공개하고, 암호화폐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기업에 의무 규정 준수에 앞서 위험 관리와 소비자 보호에 대한 자발적 준수를 촉구

▶ EBA,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MiCA 발효 전 사전 준수 촉구...ESMA, 자산서비스 기업 관련 기술 표준 공개

- EU는 '23년 4월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자산 거래와 자산으로 보호되는 암호화폐 자산인 스테이블코인 발행에 대한 포괄적 규정인 MiCA 도입을 최종 승인했고, 유럽은행감독청(EBA)*,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 등 주요 규제 당국이 세부 내용 개발에 착수

* European Banking Authority : EU 은행 전반의 효과적이고 일관된 신중한 규제와 감독 보장을 위한 독립적인 EU 기관. ▲EU 금융 안정성 유지 ▲은행의 무결성, 효율성 보호 ▲EU 전역의 단일 건전성 규정 제공 등이 목표

** European Securities and Markets Authority : EU의 금융 시장 기능 개선, 투자자 보호 강화, 관할 당국 간 협력 증진을 위한 독립적인 증권법 및 규제 기관. EU 전체 금융 시장 감시자(Watchdog)를 지향

- MiCA는 EBA와 ESMA에 긴밀한 협력을 통해 규제 기술 표준(RTS)*과 기술 표준 구현(ITS)** 및 가이드라인 개발 권한을 부여

* Regulatory technical standards : EBA와 ESMA 등 규제기관이 정의한 기술 표준으로 EU 집행위원회가 채택

** Implementing technical standards : EBA와 ESMA 등 규제기관이 정의한 기술 표준으로 시행법으로 채택

- EBA는 '24년 6월 30일 시행을 앞둔 MiCA 요건을 구체화하기 위한 첫 번째 제안*을 발표하고, 영구상환권, 민원 처리규정 등에 대한 공개 협의에 착수

* EBA statement, "The EBA encourages timely preparatory steps towards the application of MiCAR to asset-referenced and e-money tokens", 2023.07.12

- EBA는 암호화폐 규제 기본법인 MiCA 승인으로 연말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하고, 암호화폐 기업을 상대로 의무 규정예 앞서 거버넌스와 리스크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 준수를 촉구

- EBA는 첫 번째 제안은 MiCA 도입에 대한 적시 준비 장려를 위한 것으로, 암호화폐의 파괴적이고 급격한 비즈니스 모델 조정 위험을 줄이고, 감독 융합을 촉진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

- EBA는 오는 10월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의 자본요건과 스트레스 시장에서 기업의 스테이블코인 상황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한 두 번째 규칙 초안을 발표할 예정

- 또 다른 규제기관 ESMA는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암호화폐 자산서비스 제공기업(CASP)*에 대한 라이선스 승인, 고객 자산의 분리, 기업과 고객자금 혼용 금지 등이 담긴 암호자산 규제 기술 표준초안**을 공개

* crypto asset service providers : MiCA는 CASP를 전문적으로 하나 이상의 암호화폐 자산서비스 제공을 직업 또는 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기타 사업체로 정의

** Consultation Paper, Technical Standards specifying certain requirements of the Markets in MiCA

- ESMA는 MiCA 세부 규정 개발에서 총 3차례의 공개의견 수렴 진행을 계획하고 있으며, 이번 제안이 첫 의견 수렴 요청으로 이해관계자에게 9월 20일까지 의견 제공을 요청
- ESMA는 의견 수렴을 통화 확보한 피드백을 반영해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럽위원회에 기술 표준초안을 제출해 24년 6월 30일 이전에 승인을 획득할 방침
- 규제 당국의 MiCA 세부 제안 발표는 CASP가 EU 한 관할권에만 등록하면, 유럽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MiCA의 장점을 더욱 구체화했다는 평가

▶ **(EBA 제안) CASP, 관할 규제 기관에 스테이블코인 관련 상세 정보 제공 필요...긴밀 협력체계 구축을 권장**

- EBA는 제안문서에서 자산준거토큰(ARTs)*, 전자화폐토큰(EMTs)**의 거래와 해당 토큰 발행 활동에 MiCA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스테이블코인의 MiCA 준수는 시기적절한 접근이 중요하다고 강조
 - * Asset-Referenced Tokens : 토큰 가치가 법정화폐, 실물자산, 암호화폐 또는 세 가지 혼합으로 보장되는 토큰
 - ** Electronic Money Tokens : 토큰 가치가 전자적으로 저장되어 발행자에 대한 청구로 표시되는 토큰
- 스테이블코인 관련 활동은 '24년 6월 30일부터 MiCA 규정 적용이 시작되며, 그 이전에는 시민을 상대로 한 거래나 제안 요청 행위가 금지됨
- 스테이블코인 가운데 ARTs는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법이 적용되고, EMT는 적용 가능한 모든 국내법과 전자화폐 지침이 적용됨
-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지침)** ART/EMT 활동에 앞서 포괄적 법적 평가로 활동의 적법성을 확인하고, 강력한 위험 평가를 수행해 적절하고 효과적인 위험 완화 조치 식별을 권장
- EBA는 발행기관에 ▲공정하고 공개적인 투자자 정책 ▲잘 정의된 비즈니스 모델 ▲효과적 위험 관리를 위한 건전한 거버넌스 ▲강력한 복구 및 상환 조치 ▲관할 당국에 정보 제공을 기본원칙으로 권고
- 기본원칙을 고려한 준비조치 진행을 필요하며, 향후 요구사항 대비 등을 위해 시의적절한 조치를 권고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수를 위한 기본원칙]

원칙	내용
공정하고 투명한 투자자 정책	MiCA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와 보유자가 노출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투명하게 공개 - 토큰의 특성을 명확하게 정의한 암호자산 백서 발행하고 보유자를 동등하게 대우
잘 정의된 비즈니스 모델	스트레스 시나리오, 3년간 수익원, 토큰 배포 모델 등을 담은 비즈니스 모델 설명 - 제안된 ART/EMT 활동의 전체 활동과 위험 프로필과 어떻게 일치하는 성명
효과적 위험 관리와 건전한 거버넌스	책임이 잘 정의되고 투명하고 일관된 조직 구조 구축 - 충분한 자산 준비금, 운영·보안·자금세탁 등 위험 관리, 이해 상충 식별 및 관리
강력한 복구 및 상환 조치	MiCA 규정에 따른 준비금 보유와 보유자에 환매권 보장, 복구 및 회수 계획 수립 - 발행자 및 CASP는 ART 및 EMT 보유자에게 이자를 부과하지 않음
관할 당국에 정보 제공	CASP는 관할 당국에 토큰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 - EBA의 정보 제공 템플릿 사용을 권장

출처 : EBA

- **(관할 당국)** ART/EMT 시행 이전에 규제 적용 여부와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권리와 보호를 명확히 하고, 이러한 소비자 정보를 웹 사이트 제공을 권장

- ART/EMT 시행 전에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에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법적 평가와 위험 평가에 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시행 후에는 규제 준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위험 완화를 위한 조치를 마련
- EBA는 각국 관할 당국에 MiCA 준수를 위해 EBA 레벨2 수준의 기술표준과 레벨3 수준의 공공 컨설팅 관련 지침 도입을 권고했고, 관할권 간 정보 전송 준비를 강조

▶ **(ESMA 제안) 암호화폐 서비스 기업의 등록, 인가, 민원 처리, 이해 상충, 지분 인수에 대한 세부안 공개**

- ESMA는 첫 번째 제안에서 ▲특정 금융 기관의 암호화 자산서비스 제공 의사 통보 ▲암호화 자산서비스 제공자 인가 ▲암호화 자산서비스 제공자의 민원 처리 ▲이해 상충의 식별, 예방, 관리 및 공개 ▲암호화 자산서비스 제공자의 적격보유 지분 인수에 대한 제안을 제시
- ESMA는 시장 통찰력 확보를 위해 응답자의 예상 매출액, 백서 발행 계획, 온체인 및 오프체인 거래 관련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고, 관련 정보를 제안 내용 조정에만 사용하고 기밀 보장을 약속
- ESMA 베레나 로스 의장은 이번 제안을 MiCA 프레임워크 이행에서 중요한 이정표라 강조하고, 암호자산 활동에 대한 높은 규제 기준 설정이라는 목표를 구체적 요구사항으로 전환한 것이라고 설명
- **(정보 제공)** MiCA 60조는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금융 기관은 자국 금융 규제 기관(NCA)*에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지만, 기존 금융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투자회사, 신용 기관 등)은 일부 절차를 면제
* National competent authority : 법적으로 위임받거나 지정된 기능을 수행할 권한을 보유한 기관
- 금융 라이선스 보유 기업은 NCA에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이미 서비스 제공이 적절하다고 승인했기 때문에 절차를 면제했으나, 암호화 자산 정보는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제출이 필요하다고 판단
- 이번에 ESMA는 기존 금융서비스를 암호자산 분야로 확장하는 금융 기관은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특정 정보를 포함해 규제 당국에 통보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조정
- ESMA는 기존 금융서비스의 권한을 존중하지만, 효과적인 감독을 위해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에 대한 특정 정보 보안을 권고
- **(허가 신청 양식)** MiCA 62조는 암호화 자산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법인 또는 기업은 자국 NCA에 승인 신청서 제출을 의무화하지만, 정확한 정보 제공을 통한 투자자 보호 기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
- ESMA는 허가 신청 양식의 정보 제공 부족으로 투자자는 암호화 자산서비스 및 공급자와 관련된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거나, 규정 준수 및 적절한 거버넌스 도입 여부를 판단하기 힘든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
- 이번에 ESMA는 NCA가 CASP의 자격 요건을 정확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특정 식별정보 요건(법인 식별기호, 기업등록 증거, 운영 위치정보 등) ▲초기 운영 프로그램 ▲그룹 내 재무 연결 정보 ▲서비스 제공에 대한 규제 준수 조치 정보 ▲거버넌스 정보 ▲규제 준수 의무 등을 표준 형태로 제시
- ESMA는 허가 신청 양식 관련한 제안은 CASP 승인을 위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요구해 투자자 보호를 강화한다고 강조
- **(민원 처리절차)** MiCA 71조는 CASP에 고객으로부터 접수된 민원을 신속하고 공정하며 일관되게 처리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수립 및 유지하고 해당 절차에 대한 설명을 게시하도록 요구

- 암호자산과 같은 초기 시장은 고객이 받는 서비스에 대한 문제와 민원 해소에서 일관되고 통일된 접근이 중요하지만, 현 암호자산 시장은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암호자산 기업과 다른 금융 기관 간 격차가 존재
- ESMA는 전체 사용자 민원 처리에서 준수 기준을 평준화하고, 공통 요구사항과 절차 확보는 회원국 NCA 협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라고 판단
- 이번에 ESMA는 CASP에 민원 제기를 위한 절차와 표준 템플릿을 웹 사이트에 게시하고, 암호화폐 마케팅과 거래에 사용하는 모든 언어로 제공을 제안

▶ 기존 MiCA 규정, 이해 상충에 대한 대안 제시 부족 평가...이해 상충 원천인 인센티브 정책 수립 권고

- **(CASP 이해 상충)** MiCA 72조는 CASP에 이해 상충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절차의 구현·유지하고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요구
- ESMA는 MiCA가 이해 상충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지만, 이해 상충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대안이 분명하지 않다고 평가하고, 규제가 적용되는 다양한 이해 상충 유형과 분명한 해결 방안을 제시
- 이번 제안에서 ESMA는 주요 이해 상충을 ▲CASP와 고객 간 이해 상충 ▲CASP와 개별 고객 그룹 간 이해 상충 ▲CASP와 연결된 개인(직원, 주주 등)에 의한 이해 상충으로 구분
- ESMA는 MiCA가 CASP의 인센티브 정책, 보상 절차, 관행 등을 언급하지 않지만, 이해 상충의 중요한 원천이라고 강조하고, CASP에 명확한 보상 정책과 절차에 기반한 이해 상충 정책 수립을 권고
- **(CASP 적격보유 지분 인수)** MiCA 83조는 CASP의 적격지분 취득할 경우 관련 인수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당 NCA에 서면 통보를 요구
- MiCA는 NCA에 인수 적합성 평가 기준으로 인수자의 평판, 인수자의 재정적 건전성, 인수 후 지속적인 MiCA 준수 여부 등을 제시했고, 인수 평가를 위한 정보에 대한 RTS 초안 개발을 규정
- 이번에 ESMA는 인수자를 자연인, 법인, 신탁으로 구분하고 인수자 신원에 대한 일반정보를 추가하고, 주체 식별을 위해 평판 확인, 규정 준수, 금융 정보 등 특정 조항을 포함함
- ESMA는 성명을 통해 MiCA가 시행되더라도 안전한 암호화 자산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
- ESMA는 두 번째 의견 수렴은 '23년 10월에, 세 번째 의견 수렴은 '24년 1분기에 진행할 예정

- MiCA 승인 이후 EBA와 ESMA가 MiCA 규정 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 결과물로 첫 번째 지침을 공개했고, EBA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사와 규제 당국을 상대로 스테이블코인 규제 준수 기본원칙과 권고안을 제시
- ESMA는 암호자산 서비스 기업에 적용되는 5개 항목의 규제기술표준을 공개하고, 공개의견 수렴에 나섰고, 앞으로 총 3차례에 걸친 의견 수렴을 진행한다고 발표

[출처]

- Reuters, 'EU watchdog calls for early adoption of stablecoin standards' 2023.07.12.
- Ledger Insight, 'EU regulators ESMA, EBA make MiCA proposals for crypto, stablecoins' 2023.07.12.
- The Trade, 'ESMA publishes first consultation on Markets in Crypto-Assets regulation' 2023.07.1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BIS, '22 서베이 결과 공개...CBDC 도입 급증+스테이블코인 위험 고조

- CBDC 출시계획 중앙은행 전년 대비 2배 증가...'30년에 15개 소매 CBDC와 9개 도매 CBDC 등장 전망
- 전 세계 중앙은행 93%가 CBDC 시범 프로젝트 진행, CBDC와 빠른 결제 시스템을 상호 보완재로 인식

국제결제은행(BIS)이 서베이 보고서에서 '30년까지 선진국과 신흥국 24개 중앙은행이 CBDC를 도입해 디지털 통화 유통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중앙은행의 93%가 CBDC 및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추진한다고 진단

▶ CBDC 출시계획 중앙은행 전년 대비 2배 증가...'30년에 15개 소매 CBDC와 9개 도매 CBDC 등장 전망

- BIS는 '22년 말 86개 중앙은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서베이 결과*를 공개하고, 암호화폐 시장의 악재에도 불구하고, 이른 시일 내에 CBDC를 도입하려는 중앙은행 수가 전년 대비 2배 증가했다고 발표
- * BIS Papers No 136, Making headway-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2023.07
- BIS는 '30년까지 24개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CBDC에 대한 높은 관심은 현금 사용이 급감하는 가운데, 디지털 결제가 민간시장에 의해 좌우될 것을 우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
- BIS는 현재 바하마, 동부 카리브해,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이 4개국 CBDC를 출시했고, 11개 은행이 CBDC 출시 대열 합류를 앞두고 있으며, 신규 CBDC는 대부분 소매 영역에서 등장할 것으로 전망
- 도매 CBDC 영역에서는 금융 기관이 토큰화를 통해 금융시스템 접속해 국경 간 결제를 강화하는 기능을 중심으로 9개 중앙은행이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분석
- 스위스 국립은행은 '23년 6월 스위스 디지털거래소에서 도매 CBDC를 시범 발행한다고 발표했고, 유럽 중앙은행은 '28년 디지털 유로 출시를 목표로 시범운동을 앞두고 있음
- 중국은 2억 6,000만 명이 디지털 위안화 파일럿에 참여하고 있으며, 인도와 브라질은 '24년에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계획
- 보고서는 어떤 형태로든 CBDC를 연구하는 중앙은행 비율이 93%로 증가했고, 이 중 60%는 스테이블코인 및 기타 암호자산 출현 등의 요인으로 연구가 가속화됐다고 분석
- BIS는 중앙은행 40%가 소비자 및 기업의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암호자산 사용에 관한 연구를 수행했고,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암호자산이 결제에 널리 사용될 경우 금융 안정성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평가
- 금융시스템에 대한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규제 접근이 강화되며, CPMI*, IOSCO**, FSB***, BCBS**** 등 글로벌 표준화 기구를 중심으로 스테이블코인과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지침과 표준 개발이 급진전한다고 평가

* Committee on Payments and Market Infrastructures(지급 및 시장 인프라 위원회) : 1980년대 G10 국가를 중심으로 설립된 결제 및 청산 관련 제도의 안정성과 효율성 촉진을 목적으로 한 국제 표준 설정 기관

** International Organization of Securities Commissions(국제증권관리위원회) : CPMI와 공동으로 금융 시장 인프라 원칙 지침을 발표

***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 : '22년 10월 암호화폐 활동에 대한 국제 규제 프레임워크 발표

**** Basel Committee on Banking Supervision(바젤은행감독위원회) : '22년 12월 암호자산 보유 지침을 발표

▶ 전 세계 중앙은행 93%가 CBDC 시범 프로젝트 진행, CBDC와 빠른 결제 시스템을 상호 보완재로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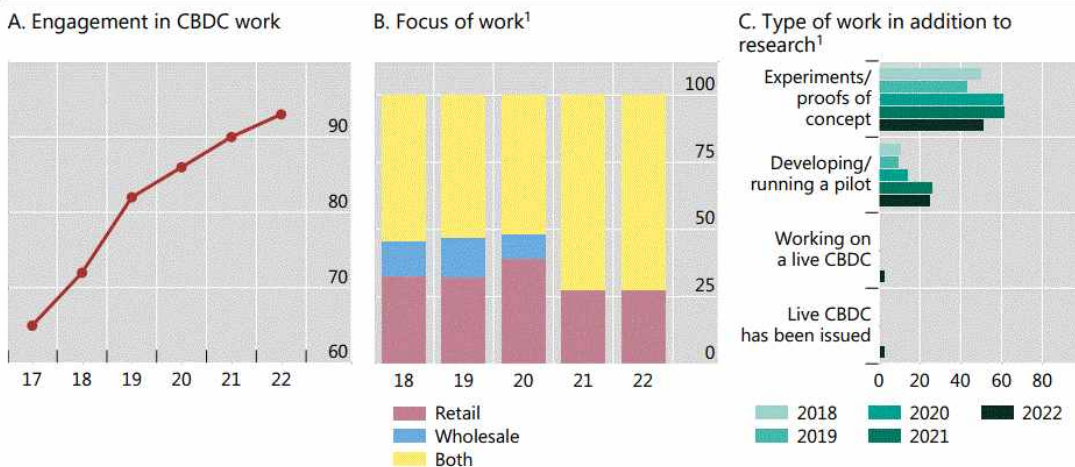
- **(도입 현황)** CBDC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중앙은행 비중이 93%로 지속 증가(그림 A)했고, 집중 분야는 소매 CBDC에만 집중하거나 소매·도매 CBDC를 동시에 고려(그림 B)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BIS는 CBDC 프로젝트 절반 이상이 구체적 실험을 수행하거나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그림 C)해 빠르게 진전되어 다수의 중앙은행이 '22년에 CBDC 프로젝트를 완료했다고 분석
- BIS는 소매 CBDC가 도매 CBDC보다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전 세계 중앙은행의 1/4이 소매 CBDC를 시범운영하고 있다고 파악

[각국 중앙은행 CBDC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 양상]

Central bank involvement in CBDC work advances further

As a percentage of respondents

Graph 2



¹ Share of respondents conducting work on CBDCs.

출처 : BIS, Making headway—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2023.07

- **(도입 동기)** 소매 CBDC 도입은 선진국(AEs)*과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EMDEs)** 모두 국내 결제 효율성과 결제 안정성 때문으로 고려하며, 금융 안정성 및 국경 간 결제 효율성에서도 비슷한 가중치를 보여 도입 동기가 유사하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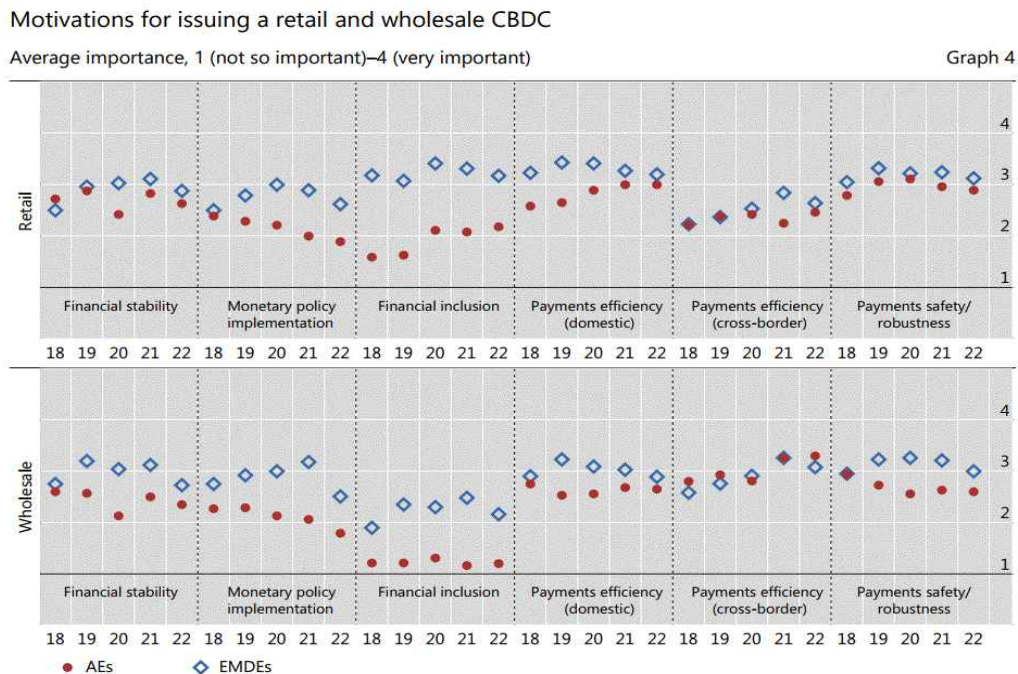
* Advanced Economies : IMF 세계 경제 전망 분류 기준상 선진국을 의미하며, 북미와 유럽이 해당

** Emerging Market and Developing Economies : IMF 세계 경제 전망 분류 기준상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을 의미하며, 아시아, 남미, 아프리카 등이 해당

- 그러나 EMDEs의 소매 CBDC는 AEs와 비교해 금융 포용성을 목표로 한 추진 비중이 매우 높으며, 통화 정책 구현에서도 AEs보다 높아 차이를 보임
- 도매 CBDC 도입은 AEs와 EMDEs 모두 국경 간 결제 강화를 목적으로 추진되며, 금융 포용성 향상은 가장 낮은 동인으로 나타남
- 중앙은행은 도매 CBDC 도입으로 국경 간 결제에서 현 결제 시스템의 제한된 운영 시간 문제 해결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고, 복잡한 거래 절차 간소화, 플랫폼 호환성 개선, 데이터 포맷 유지 등이 뒤를 이음

- EMDEs는 소매 CBDC 도입으로 컴플라이언스 확인 절차의 간소화에 대한 기대치가 높게 나타났지만, AEs는 비중이 작아 차이를 보임
- 전 세계 중앙은행은 CBDC와 빠른 결제 시스템(FPS)*을 상호 보완재로 여겨,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소매 CBDC와 빠른 결제 시스템을 모두 보유해 다양한 추가 기능 제공을 통한 잠재적 가치 실현을 추진
 - * Fast Payments Service : 실시간 결제, 신속 결제로도 불리며 은행과 비은행을 연결하고 최종 사용자를 위한 다양한 대체 서비스(Overlay)를 제공해 연중무휴 24시간 결제를 지원
- CBDC와 FPS 간 융합을 통해 CBDC는 더 많은 금융 기관과 금융서비스 미 이용자에게 디지털 화폐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고, FPS는 기존에 불가능했던 프로그래밍 기능과 오프라인 결제가 가능해짐

[소매 CBD와 도매 CBDC의 도입 동기]



출처 : BIS, Making headway—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2023.07

▶ CBDC 도입, 신흥시장 및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적극적...CBDC 발행을 위한 법률 정비는 더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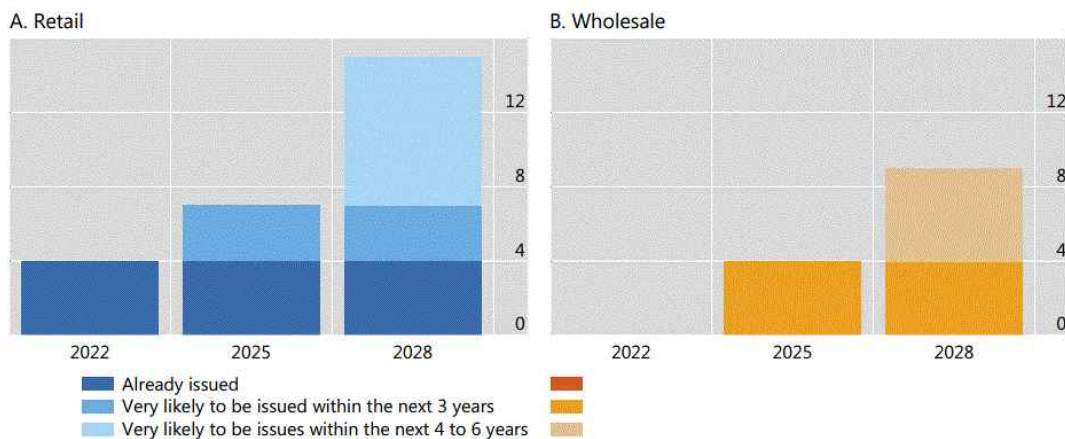
- 단기적(향후 3년 이내)으로 소매 CBDC 발행을 계획하는 중앙은행 비율이 15%에서 18%로 증가했고, 조만간 발행 계획이 없다는 은행 비중도 소폭 상승해 소매 CBDC 발행 계획이 점점 확정적으로 진행됨
- 지난 몇 년간 지속적으로 소매 CBDC 발행 추진은 AEs 중앙은행보다 EMDEs 중앙은행이 더 적극적
- 단기적으로 도매 CBDC 발행을 계획하는 중앙은행 비율이 8%에서 16%로 2배 상승했고, 중기적 발행을 계획하는 은행 역시 54%에서 58%로 상승
- 도매 CBDC 역시 AEs 중앙은행보다 EMDEs 중앙은행이 더 적극적인 모습이 나타남
-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바하마, 동부 카리브해, 자메이카, 나이지리아 등 4개국이 소매 CBDC를 발행했고, 향후 몇 년 안에 소매 CBDC 발행을 계획하는 중앙은행이 15개, 도매 CBDC를 계획하는 중앙은행이 9개사로 나타남

[향후 몇 년 내 CBDC 발행 계획]

The number of live CBDCs may grow in the next few years¹

Count

Graph 8



¹ The number of CBDCs already issued is based on Auer et al (2020). The estimated number of CBDCs in 2025 and 2028 is determined based on the number of central banks indicating that the issuance of a retail or wholesale CBDC was very likely.

출처 : BIS, Making headway—Results of the 2022 BIS survey on central bank digital currencies and crypto, 2023.07

- CBDC 발행을 위해서는 중앙은행에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프레임워크 도입이 필요하지만, 법적 권한을 보유한 중앙은행 비중이 26%에서 27%로 소폭 상승하는 데 그침
- 또한, 전 세계 관할권의 8%만이 CBDC 발행을 위한 법률을 변경하거나 이를 허용할 법적 권한을 명확히 한 것으로 나타났고, 중앙은행 1/4은 필요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답했고, 40%는 불명확하다고 응답
- CBDC 추진 중앙은행들은 설계 논의 등을 위해 각종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며, 소매 CBDC는 공공기관, 기술기업, 상업은행의 비중이 높고, 도매 CBDC는 외부 기술기업 비중이 높은 대신 공공기관 비중이 작음
- 일반적으로 CBDC 개발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는 도매 CBDC보다 소매 CBDC에서 더 활발하고, EMDEs보다 AEs에서 더 일반적임
- 전 세계 93% 중앙은행이 CBDC를 어떤 방식으로든 검토하지만, CBDC 도입을 반대하는 중앙은행의 반 CBDC 견해도 점점 확고해짐
- 아직 유보 상태인 국가로는 미국이 대표적이며, '23년 6월 미 재무부는 CBDC 발행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에 앞서 플로리다주는 CBDC를 '빅 브라더의 디지털 달러'라 지칭하고 금지('23.05)

- BIS가 86개 중앙은행 대상 서베이에서 CBDC 출시를 계획하는 중앙은행 전년 대비 2배 증가해 빠르게 확산한다고 분석하고, '30년에 15개 소매 CBDC와 9개 도매 CBDC가 등장할 것으로 전망
- 전 세계 중앙은행 93%가 CBDC 시범 프로젝트 진행하며, 신흥 및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더 적극적으로 소매 CBDC를 중심으로 도입을 추진하며, 상대적으로 법률 정비는 더디다고 분석

[출처]

- Reuters, 'Twenty-four central banks will have digital currencies by 2030, survey shows', 2023.07.10.
- Decrypt, 'Crypto, Stablecoins May Pose 'Threat to Financial Stability' if Widely Used: BIS Survey', 2023.07.10.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서클 CEO, "스테이블코인 입법 없으면 달러의 글로벌 지배력 위태"

-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투표를 앞두고 업계 의견 반영,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
- 인터넷 글로벌 상거래 통화 경쟁 가열, 디지털 위안화와 브릭스의 달러 대체 움직임을 위험 징후로 제시

서클 제레미 알레어(Jeremy Allaire) CEO가 금융혁신에서 경쟁국이 미국을 추월해 美 달러 지배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글로벌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 스테이블코인 입법이 시급하다고 강조

▶ 하원의 스테이블코인 법안 투표를 앞두고 업계 의견 반영,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을 촉구

- 알레어는 트위터에서 미 정책 입안자를 상대로 규제 당국이 스테이블코인 보호에 나서지 않으면 미국의 달러가 글로벌 지배력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
- 또한, 달러가 세계 기축통화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디지털 달러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을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
- 알레어의 발언은 하원 금융서비스 위원회(HFSC)가 스테이블코인 법안에 대한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법안 도입을 촉구하는 업계의 의견이 담겼다는 평가
- 하원 양당은 그동안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스테이블코인 발행자 감독에서 얼마만큼의 권한을 가져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대립했으나 점차 타협점에 도달해 가는 상황
- 서클은 시가총액 기준 2위 스테이블코인인 USD코인을 발행하고 있으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발행사 팩소스(Paxos) 규제에 나서 명확한 법적 프레임워크 도입을 강력하게 촉구
- 서클은 의회에 제출한 호소문에서 디지털 통화는 송금을 더 빠르고 저렴하게 하며, 미 달러를 전 세계에서 절대 강자의 지위를 더욱 굳건하게 한다고 강조
- 그렇지만, 감시 기능을 내장한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가 크게 확산 되는 동안, 미국 달러는 지난 8년 동안 세계 통화 보유액에서 비중이 줄어들어 실제적인 위협이 진행되고 있다고 강조
- 더욱이 최근 브릭스 국가가 달러 대신 금으로 뒷받침하는 통화 발행에 나서 위기가 더욱 커졌다고 강조

- 서클 등 암호화폐 업계는 하원이 스테이블코인 법안 투표를 앞둔 상황에서, 미 달러의 글로벌 영향력 유지를 위해서는 디지털자산에 대한 신뢰 확보와 스테이블코인 법안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
- 이들은 인터넷 공간에서 글로벌 상거래 통화를 둘러싸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강조하고, 중국 디지털 위안화가 급성장했고, 브릭스 국가가 달러를 금으로 대체하는 등 이상 징후가 진행되고 있다고 경고

[출처]

- Decrypt, 'The US Dollar Is Under Threat, Says Circle CEO in Warning to Congress', 2023.07.14.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스테이킹 이더리움, 450억 달러로 전체 공급량 20% 도달

- 상하이 업그레이드 효과,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안 목적을 일치시킨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 진전으로 평가
- 최대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리도가 32%로 시장 선도, 코인베이스 등 거래소가 19%로 추적

이더리움 전체 공급량의 20%에 달하는 450억 달러가 스테이킹 된 것으로 분석됐고, 이는 사상 최대 금액으로 지난 4월 상하이 업그레이드 효과로 풀이되며,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안이 일치된 네트워크 발전이라는 평가

▶ 상하이 업그레이드 효과, 경제적 인센티브·보안 목적을 일치시킨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 진전이란 평가

- 탈중앙화 금융 분석 서비스인 뉘 애널리틱스(Dune Analytics) 분석 결과, 스테이킹 이더리움이 450억 달러로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 이더리움 보유자들은 네트워크 보안 유지를 위해 토큰을 네트워크에 맡기고 이에 대한 보상을 받는 것을 선호해 744,000개 검증자가 2,400만 개의 이더리움을 스테이킹 한 것으로 분석됨
- '23년 4월 상하이 업그레이드 직전까지 스테이킹 된 이더리움은 290억 달러로 전체 공급량의 14.5%에 그쳤으나, 인출이 가능해진 상하이 업그레이드 이후 스테이킹이 급증함
- 암호화폐 업계는 이더리움 스테이킹 급증은 환경친화적인 합의 모델을 제시한 이더리움의 비전을 사용자들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라고 분석하고 주목할 만한 성과라고 평가
- 암호화폐 분석가 아담 코크란(Adam Cochran)은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안 목표를 탈중앙화 네트워크에서 일치시킨 성과라고 강조하고 이는 네트워크의 큰 진전이며, 기념비적인 이정표라고 평가
- 뉘 분석에 따르면, 사람들은 이더리움 스테이킹에서 암호화폐 시장 최대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인 리도 파이낸스(Lido Finance)를 가장 선호하며, 리도는 전체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32%를 차지
- * Liquid Staking : 암호화폐를 스테이킹(예치) 하면, 그에 상응하는 유동성 토큰을 지급해 여러 디파이 프로토콜에서 다양한 자산 활용을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스테이킹 서비스로, 리도는 stETH 토큰을 제공
-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OKX 등 암호화폐 거래소는 거래 수수료 감소에 따른 대체 수입원으로 스테이킹을 주목해 전체 스테이킹 이더리움의 19%를 점유하고 있음

- 스테이킹 이더리움이 전체 공급량의 20%에 해당하는 450억 달러를 돌파했고, 이는 경제적 인센티브와 보안 목적을 일치시킨 탈중앙화 금융 네트워크의 진전으로 매우 기념비적인 이정표라는 분석
- 최대 유동성 스테이킹 프로토콜 리도 파이낸스가 3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스테이킹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주목하는 암호화폐 거래소가 19%로 뒤를 이음

[출처]

- Decrypt, 'Staked Ethereum Now Accounts for 20% of the Total Supply' 2023.07.1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미 SEC vs 코인베이스 소송, 첫 심리 진행..SEC 주장에 회의적 평가

- 뉴욕 남부지방법원, 양사에 스테이킹 산업 정의·코인베이스 IPO·SEC 규제 권한 등 질의...10월 재개 예정
- 법원, SEC의 법 집행에 불구하고 전면적 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부조화가 있다고 지적

뉴욕 남부지방법원에서 SEC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소송에 대한 첫 번째 심리를 진행했고, 이번 소송이 증권법 적용, 시장 구조, SEC 규제 권한 등에서 중요한 선례가 될 것이라는 예측 속에 관심이 집중됨

▶ SEC, 법 집행에 불구하고 전면적 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강조...법원, 두 주장에 부조화가 있다고 지적

- 이날 캐서린 폴카 페일라(Katherine Polka Faila) 판사는 2시간 이상 진행된 사전 심리에서 스테이킹의 정의부터 코인베이스의 IPO 제출, 주요 질문원칙*의 사용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주제에 대해 질문
* major questions doctrine : 미국 행정법 법령 해석 원칙으로, 의회가 정치적·경제적 중요성이 큰 사안은 행정 기관에 위임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는 원칙
- 페일라 판사는 암호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SEC가 증권법 위반에 대한 집행을 주장하고 동시에, 암호화폐를 전면적으로 규제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는 것은 자연스럽지 않다고 지적
-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과거 암호자산 규제 권한이 없다고 언급한 발언의 맥락을 묻는 판사 질문에 대해 SEC는 미국의 모든 암호화폐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행위를 규제한다고 답했고, 판사는 어떤 행위를 규제할지 고려하려면 무엇을 규제할지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
- SEC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은 증권이 아니며, 법적 지위에 문제가 없다고 답했고,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아직 언급한 적이 없다고 언급
- 코인베이스는 SEC가 상장을 승인했을 당시 이번에 SEC가 미등록 증권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자산이 이미 거래되고 있었다고 주장했고, SEC는 상장 허용이 면죄부는 아니라고 반박
- 스테이킹 프로그램에 대해 코인베이스는 IT서비스와 유사한 계약으로 계약의 대가라고 주장해 증권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SEC는 IT서비스가 기업 역할을 할 수 있어 스테이킹은 투자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
- 이번 심리는 코인베이스가 소송 답변서를 신속하게 제출해 당초 일정보다 앞당겨졌고, 판사는 10월까지 현실적인 일정을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고, 제출 문서의 규격 준수를 강력하게 권고

- 뉴욕 남부지방법원이 SEC와 코인베이스의 증권법 위반 소송 심리를 시작했고, 스테이킹 산업 정의, 코인베이스의 IPO, SEC 규제 권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한 논쟁이 전개됨
- 법원은 SEC가 소송 제기로 법 집행에 나선 상황에서 산업을 전면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언급하는 것에 대해 부조화라고 지적했고, SEC의 주장에 대해 법원이 회의적이라는 분석이 제기됨

[출처]

- Coindesk, 'Coinbase, SEC Spar Over Definition of Securities, Nature of Staking in First Court Hearing' 2023.07.14..

글로벌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Global Blockchain Tech, Policy & Industry Trends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CONTENTS

1. 금융안정위원회,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규제 최종 권고안 발표
2. SEC, 리플 판결에 반발...항소 방침 공개하고 예산 증액 요청
3. 英 법원, 비트코인 파일 형식 저작권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허용
4. 미 하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규정한 '금융혁신법' 발의
5. 부테린, 이더리움 계정 추상화 강조...이메일 계정처럼 쉬운 관리 제시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금융안정위원회(FSB), 암호화폐·스테이블코인 규제 최종 권고안 발표

- FSB,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권고...당국 간 협력, 암호화폐 기업 거버넌스, 공시 요건 등 강조
- FSB 규제 권고 사항, 상식적이고 단순한 수준이라는 지적 제기...기술 진화와 규제 간 격차 심화 우려

전 세계 금융 규제에서 표준기관 역할을 금융안정위원회(FSB)*가 포괄적 규제와 규제·감독의 일관성 등을 목표로 한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규제 프레임워크 최종 권고안*을 발표

* Financial Stability Board(금융안정위원회) : 각국 금융당국과 국제 표준 제정자들이 회원기관으로 참여한 금융 규제 표준화 기관으로, G20 대표로 구성된 조직이 BIS 후원하에 금융시스템 취약성 파악, 금융 기관 규제 등의 업무를 수행

** FSB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 Activities, 2023.07.17

▶ FSB,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권고...당국 간 협력, 암호화폐 기업 거버넌스, 공시 요건 등 제시

- FSB는 이번 최종 권고안이 지난해 파산한 FTX와 테라(Terra) 사례를 면밀하게 분석하고, '22년 10월 초안 공개 이후 공개협약에서 제기된 다수의 피드백을 반영*했다고 발표
- * FSB는 암호화폐 기업 파산 등 최근의 사건을 반영해 고객 자산의 적절한 보호, 이해 상충 관련 위험의 해결, 국경 간 협력 강화를 강화했다고 설명
- FSB 규제 프레임워크는 ▲암호자산에 대한 활동, 규제, 감독, 접근 등에서 일관성과 포괄성을 촉진하고 국제 협력, 조정, 정보 공유를 강화를 위한 권고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감독, 감시를 통한 금융 안정성 위협 대처를 위한 상위 수준 권고로 구성
- FSB는 규제 프레임워크 최종 권고안에서 대형 암호화폐 기업의 파산 등 위험을 해결하기 위해 각국 규제 기관에 암호화폐 관련 9대 권장 사항, 스테이블코인 관련 10대 권장 사항을 각각 제시
- 각 권장 사항에는 ▲규제 당국 간 협력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에 대한 거버넌스 요건 ▲암호자산 산업 전반에 걸친 의무 공시 요건 등이 담김
- FSB는 권고안 전반에서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을 강조하고,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은 그들이 제기하는 위험에 상응하는 일관되고 포괄적인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강조
- FSB의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최종 권고안 작성에 G20 대표들이 깊게 관여해, 암호자산 규제에서 강경 기조가 지속되고, 암호화폐 기업에 대한 규제 준수 요구가 한층 강화될 전망

▶ 9대 암호자산 활동 및 시장 규제 권고 제시...자산 보호, 이해 상충 해결, 국경 간 협력 중요성 강조

- FSB는 규제 프레임워크 한 축으로 암호자산 활동과 시장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상위 수준 권장 사항*을 통해 9개 요소를 제시
- *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

- FSB는 '22년 초안에서 ▲기존 규제 범위와 권한에 대한 국경 간 격차 문제 ▲암호자산 관련 커스터디, 거래, 대출 위험 문제 ▲분산원장기술에 대한 광범위한 사용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고, 공개의견 수렴에서 제기된 ▲고객 자산의 적절한 보호 ▲이해 상충 관련 위험 해결 ▲국경 간 협력 강화 등을 새로운 중점 과제로 추가
- FSB는 각국에 디지털자산에 대해 기존 금융 규제와 유사한 규제 적용에 나설 것을 권고하고,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전담 규제 기관 설립과 규제 일관성 및 지식공유 확대를 위한 폭넓은 협력체계 구축을 제안
- 규제 프레임워크는 발행자, 서비스 제공자, 거래소, 월렛 등에 대한 효과적인 거버넌스 및 위험 관리 체계, 정보수집, 저장, 보호 및 시기적절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한 프로세스 구축 등을 포함하도록 권고
- FSB는 암호자산 활동 및 시장 규제에 대한 권고에 이어 암호자산 활동에 대한 국제규제 및 감독 접근방식을 지속적으로 조율해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상호보완적 규제 프레임워크로 발전시켜 나갈 방침

[FSB의 암호자산 활동과 시장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상위 수준 권고 사항]

	구분	내용
1	규제 권한 및 도구	암호자산 활동 및 시장을 적절하게 규제할 수 있는 권한, 도구, 적정 자원을 보유
2	일반 규제 프레임워크	암호자산 및 서비스 제공자에게 동일 활동,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적용
3	국가 간 협력 및 조정	효율적 규제와 감독 결과 일관성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
4	거버넌스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기업에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마련과 공개를 요구
5	위험 관리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기업에 효과적인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 요구
6	정보수집, 기록, 보고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기업에 핵심 인프라에 대한 보고 프레임워크 구축 요구
7	공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기업에 명확·투명한 정보를 공개 요구(고객·이해관계자 대상)
8	상호의존성 위험 해결	암호자산 생태계뿐 아니라 더 넓은 금융시스템 간 상호연결성을 식별하고 모니터링
9	다중기능 기업 포괄적 규제	암호자산 서비스 제공기업의 다양한 위험을 포괄적 규제, 감독을 적용

출처 : FSB,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Crypto-Asset Activities and Markets,

▶ 10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권고 제시, 광범위한 접근 통해 각국 규제 프레임워크와 통합을 제안

- FSB는 규제 프레임워크의 또 다른 축으로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배포에 대한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상위 수준 권장 사항*을 통해 총 10개 요소를 제시
 - *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규제는 상환권 보장, 안정화 메커니즘, 예비자산 구성 및 품질에 대한 명확한 공개를 통해 신뢰와 투명성을 유지하도록 했고, 독립적이고 정기적 감사를 통해 스테이블코인 양과 예비자산의 가치 및 구성을 확인하도록 권고함
 - * Global stablecoin : 하나 또는 여러 관할권에서 결제수단 또는 가치저장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시스템적으로 중요해질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을 의미
- 권장 사항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방식을 취하며, 전 세계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에 잠재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다양한 규제 프레임워크에 통합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설계됐다고 강조
- FSB는 이번 권고에서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보편적으로 합의된 법적 규제적 정의를 제시하지 않고, 시장 참여자와 규제 당국이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그대로 표현했다고 언급

- 다만,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암호화 자산 및 기타 스테이블코인과는 ▲안정화 메커니즘의 존재 ▲결제수단 및 가치저장 수단으로 유용성 ▲여러 관할권에서 잠재적 활용 및 채택 가능성 등에서 차이를 보인다고 설명
- 글로벌 스테이블코인은 안정화 메커니즘과 결제수단으로서 유용성에서 다른 암호화 자산과 구분되고, 여러 관할권에서 채택되는 특성으로 기타 스테이블코인과 차별된다고 설명

[FSB의 글로벌 스테이블코인(GSC)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상위 수준 권고 사항]

	구분	내용
1	규제 및 감독 준비	GSC 계약 및 감독을 위해 적절한 권한, 도구, 적정 자원을 보유하고 활용
2	포괄적인 감독	국제 표준과 일치하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규제 및 감독 요구사항을 적용
3	국가 간 협력 및 조정	국내외 협력 및 정보 공유 및 협의 체계를 구축해 포괄적인 GSC 규제와 감독을 보장
4	거버넌스	GSC 협정을 통해 포괄적인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마련과 공개를 요구
5	위험 관리	GSC 활동에서 중대 위험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리스크 관리 프레임워크 구축을 요구
6	정보 저장 및 접근	GSC 협정을 통해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보고를 위한 강력한 프레임워크 구축을 요구
7	GSC 복구 및 해결	GSC 협정을 통해 중요 기능과 활동 연속성을 위한 복구, 파산, 청산 계획 수립을 요구
8	공시	사용자 및 이해 당사자에서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이해 상충, 상환권, 재무 등을 공개
9	환매권, 안정화 및 건전성	사용자에게 강력한 법적 청구권을 제공하고 시기적절한 상환 보장을 요구
10	사전 규제 준수 요구	GSC 서비스 제공 전에 관할권의 규제 및 감독 준수를 요구

출처 : FSB, High-level Recommendations for the Regulation, Supervision and Oversight of Global Stablecoin Arrangements

▶ FSB,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 후속 조치 제시...지속적인 조정 통한 보완 방침 강조

- FSB는 암호자산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최종 권고안 발표에서 '25년까지의 향후 일정을 제시하고 지속적인 조정을 통한 보완 방침을 강조
- **(암호자산 후속 조치)** 암호자산 관련해서 '24년 말까지 국제규제 및 감독에 대한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해 나갈 방침
- 규제 접근법에서 여러 기능을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암호자산 서비스 및 탈중앙화 금융 제공기업이 금융 안정성에 미치는 위험을 분석해 반영할 계획이며, 관련 위험에 대한 추가 정책 개발 필요 여부를 평가할 방침
- '25년 말까지 국제 표준 개발기구 및 국제기구와 협의해 각 관할권의 권고 사항 이행을 검토하고, 권고 사항 업데이트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
- **(스테이블코인 후속 조치)** FSB는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관련해 국제 표준개발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계약에 대한 글로벌 규제 및 감독에 대한 접근법을 지속적으로 조정할 계획
- 이를 통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의 포괄적이고 일관되며 상호보완적인 특성을 강화할 방침
- '25년 말까지 권고 사항 이행을 검토하고, 권고 사항 추가 및 이행 추진을 위한 추가 조치 여부를 결정할 계획

[FSB의 규제 프레임워크 향후 추진 계획]

구분	시기	내용
암호자산 행동 및 시장	2024년 말	암호자산 활동에 대한 글로벌 규제 및 감독 접근법의 지속적인 조정
		관련 규제의 포괄성, 일관성, 상호보완성을 보장
		여러 기능이 복합된 암호자산 서비스 및 디파이 기업의 위험 분석
		위험 분석 결과를 통해 새로운 정책 개발 여부를 결정할 계획
	2025년 말	각 관할권의 권고 이행을 검토하고 권고 추가 여부를 평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속	GSC 계약에 대한 글로벌 규제 및 감독 접근법의 지속적인 조정
		관련 규제의 포괄성, 일관성, 상호보완성을 보장
	2025년 말	권고 사항 이행 검토와 권고 사항 추가 여부를 결정

출처 : FSB, 홈페이지 내용 취합

▶ FSB 규제 프레임워크, 상식적이고 단순한 수준이라는 지적 제기...기술 진화와 규제 간 격차 심화 우려

- 업계 일각에서는 FSB의 암호화폐 및 스테이블코인 규제 최종 권고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제안이 매우 상식적이고 단순한 수준이라고 평가
- 위험 관리, 거버넌스,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명확한 정책 등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과 전망이 결들여져야 하는데 권고 나열에 그쳤다는 지적
- 스테이블코인 관련 권고에서는 알고리즘 스테이블코인 관련 금지나 제한 조건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사람의 참여 없이 독립적으로 운영 가능한 탈중앙화 프로젝트 및 시스템도 빠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
- 업계는 디지털자산 관련 제품과 기술 진화가 빨라 규제와 집행은 계속 뒤처질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고, FSB의 권고도 현실과는 괴리가 있다고 우회적으로 비판

- FSB가 암호자산 활동과 시장 규제에 대한 권고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에 대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하고, 동일 행위, 동일 위험, 동일 규제 원칙에 기반한 포괄적인 규제 프레임워크를 제시
- FSB는 '25년까지 지속적인 조정을 통해 규제 포괄성을 높여갈 계획이지만, 업계에서는 권고가 상식적 수준이며, 포함되어야 할 현안이 빠지는 등 기술과 규제 간 격차가 점차 심화한다고 우려

[출처]

- Axios, 'Financial Stability Board finalizes crypto framework' 2023.07.19.
- Decrypt, 'G20 Body Issues 9 Regulatory Recommendations to Rein in Crypto Industry' 2023.07.17.
- FSB, 'FSB Global Regulatory Framework for Crypto-asset Activities' 2023.07.17.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SEC, 리플 판결에 반발...항소 방침 공개하고 예산 증액 요청

- 미 법원, 리플랩스의 기관 판매는 증권법 위반...XRP 알고리즘 판매는 무혐의, 사실상 리플 승리 평가
- SEC, 항소 방침 공개하고 의회에 '24년 추가 예산 요청...집행조치 강화로 업계와의 갈등 지속 전망

미 법원의 SEC vs 리플 소송 판결 이후 미 암호화폐는 SEC를 상대로 첫 승리를 거뒀다고 고무됐지만, SEC 게리 겐슬러 위원장이 리플 판결에 실망스럽다고 언급하고, 항소 방침을 제기를 언급해 업계와 갈등이 지속될 전망

▶ SEC vs 리플, 2년 7개월 만에 판결..SEC 100여 건 소송 가운데 암호화폐 기업의 첫 번째 승리로 평가

- 7월 13일 미국 법원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블록체인 플랫폼 리플(Ripple)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토큰의 기관 판매는 연방 증권법 위반이지만, 알고리즘에 따른 토큰 판매는 증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
- 로이터 등 외신은 미국 지방법원 아날리사 토레스(Analisa Torres) 판사가 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암호화폐 기업에 첫 번째 승리*를 안겼다고 강조하고, SEC는 부분적 성과에 그쳤다고 평가
 - * SEC는 다양한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고 100건 이상의 암호화폐를 상대로 강제 집행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합의로 종결됨
- 판결 직후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자사 플랫폼에서 XRP* 거래를 재개할 방침이라고 밝히는 등 미 암호화폐 업계가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SEC와 규제 관할권을 놓고 대립 중인 각종 소송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
 - * 리플이 발행하는 암호화폐 토큰 명이며, 리플이 구축하고자 하는 생태계 명칭이기도 함
- SEC는 리플의 기관 투자자 상대 XRP 직접 판매가 증권법 위반이라는 결정에 만족한다고 밝혔지만, 며칠 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소매 상품(프로그램 판매) 판결에 실망했다고 언급하고 항소 방침을 시사
- 미 법률업계는 암호화폐 업계의 들뜬 분위기는 이해하지만, 이번 판결로 디지털자산의 증권성 여부에 대한 각종 논란이 해결됐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지적

▶ 미 법원, 리플랩스의 기관 판매는 증권법 위반..XRP 알고리즘 판매는 무혐의, 사실상 리플 승리 평가

- SEC는 '20년 12월 리플 발행사 리플랩스(Ripple Labs)와 경영진 리센(Christian A. Larsen)과 갈링하우스(Bradley Garlinghouse)를 13억 달러 상당의 미등록 증권 판매 혐의로 뉴욕 남부지방법원에 제소
- 리플랩스는 XRP는 증권이 아니며, 따라서 SEC는 XRP를 규제할 권한이 없다고 반박하고 소송전에 돌입
- 양사 법정 공방은 약식재판 신청에도 불구하고, 2년 7개월 동안 지속됐고, '23년 7월에 1심 판결이 선고됨
- 그간 암호화폐 업계는 SEC 주장대로 리플랩스의 XRP 판매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하면, 암호화폐 대부분이 미등록 증권으로 분류되어 SEC의 강력한 규제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하며 법원 판결을 주목

- 법원은 SEC가 주장한 리플랩스의 ▲서면 계약에 따른 기관 판매(Institutional Sales) ▲거래소 및 알고리즘을 통한 프로그램 판매(Programmatic Sales) ▲서면 계약에 따른 개인·단체에 기타 배분 혐의 가운데 기관 판매 혐의는 증권법 위반에 해당하나, 나머지는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 법원은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하위 테스트(Howey Test)*를 적용했고, 프로그램 판매는 타인의 노력으로부터 비롯되는 투자 수익에 대한 기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증권이 아니라고 판단
 - * 거래가 투자 계약으로 증권에 속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적 테스트로 ①자금 투자가 ②공동사업에 투자되고 ③투자 수익을 기대하고 ④수익이 타인의 노력으로 발생하는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증권으로 간주
- 토레스 판사는 알고리즘을 통한 프로그램 판매는 블라인드 매수/매도 거래며, 구매자는 자신이 지급한 금액이 리플이나 다른 XRP 판매자에게 전달되는지 알 수 없으므로 투자 계약이 아니라고 설명
- 또한, 리플 임원이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XRP를 판매하고,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등 기타 배분 역시 유가 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

[SEC vs 리플의 증권법 위반 소송 판결]

혐의	판결	비고
서면 계약에 따른 기관 판매 (7억 2,890만 달러 상당)	증권법 위반	기관 투자자, 헤지 펀드 및 기타 당사자에게 XRP를 직접 판매했고 이는 증권법 위반(투자자들은 리플의 작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XRP를 구매)
거래소 및 알고리즘을 통한 프로그램 판매(7억 5,760만 달러 상당)	증권 판매가 아님	SEC가 주장하는 투기성 투자자가 타인의 노력으로 파생될 이익에 대한 합리적 기대를 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증권 판매에 해당하지 않음
	임원의 방조 혐의는 기각	리센과 갈링하우스가 다른 규제 체제의 법률이 아닌 증권법이 XRP에 적용된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또는 무시했는지는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기각

출처 : 외신 보도 취합/재구성

- 하지만, 리플이 기관 투자자, 헤지 펀드를 대상으로 한 7억 2,890만 달러의 XRP 판매는 증권법 위반으로 결정
- 법원은 기관 투자자 대상 XRP 판매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회사의 목표에 대한 전략적 가치 제안이라고 결정하고, 증권에 속한다고 결정

▶ 암호화폐 업계, 산업 전반의 획기적 판결로 환영...법률업계, 디지털자산 증권 논란은 진행 중으로 진단

- 판결 이후, XRP 토큰이 96% 급등했고,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 제미니 등이 XRP 판매 재개 방침을 밝히는 등 법원 결정을 크게 반기는 분위기
- 리플은 공식 블로그에 XRP는 증권이 아니고 소송전에서 승리했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리플뿐 아니라 미국 암호화폐 산업 전반의 획기적 판결로 미국 암호화 규제에서 좋은 선례로 작용할 것이라고 강조
 - * XRP is Not a Security: Ripple's Landmark Victory in SEC Lawsuit, 2023.07.19
- 암호화폐 업계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회가 디지털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 요구를 제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코인베이스와 SEC 소송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기대

- SEC는 소매 관련 법원 판결에 실망했다고 밝히고, 법원 결정에 대해 다양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혀 항소 가능성을 제기

▶ SEC, 암호화폐 산업은 '사기와 남용이 만연한 서부 시대'...강력한 집행조치가 효과적이란 원래 입장 고수

- 캔슬러 위원장은 법원 판결 이후에도 암호화폐는 사기와 남용이 만연해 있다고 비난하고, 새로운 규정 도입보다는 강력한 집행조치가 더욱 효과적이라는 당초 입장 고수
- 캔슬러 위원장은 집행조치 남발 지적에 대해 '그것이 바로 SEC가 하는 일'이라고 강조하고, '60년 이후 내부자 거래와 같은 문제에 정기적인 집행조치로 문제를 해결해왔다고 주장
- 또한, SEC는 시장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부여된 권한을 이용해 매년 700건 이상의 집행조치를 취하며, 암호화폐는 그 가운데 일부라고 강조
- 캔슬러 위원장은 규정을 위반할 수 있는 기업들을 편견 없이 규정을 준수하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여기에는 암호화폐 개발 기업과 암호화폐 거래소가 포함된다고 강조
- 또한, 암호화폐와 인공지능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규제 감독이 필요한 유망 기술 분야라 강조하고, 암호화폐 시장이 더 많은 규제가 필요로 한다고 주장하고 추가 예산을 요청

▶ SEC, 상원에 '24년 예산(23억 6,400만 달러)에 7,200만 달러 증액 요청...의원들, 규제 불투명 우려 제기

- 캔슬러 위원장은 상원위원회에 참석해 규정 위반이 만연한 암호화폐 산업으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7,200만 달러의 추가 예산을 요청하고 SEC 조직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
- 최근 상원이 승인한 '24년 예산에 따르면 SEC에 23억 6,400만 달러의 예산이 책정됐지만, 캔슬러 위원장은 인플레이션과 추가 직원 채용을 위해 추가 예산을 요구
- 캔슬러 위원장은 '23년 현재 SEC는 4,685명의 직원이 근무하며, 직원 절반가량이 집행 및 조사 업무에 배치됐다고 공개하고, 추가 예산이 승인되면, 170개 직책을 추가해 직원을 5,139명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설명
- 상원의원들은 캔슬러 위원장은 규제 방침에도 불구하고, 암호화폐 규제에서 SEC가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전 FTX CEO가 엄청난 자금을 끌어모을 때 SEC는 어디에 있었냐고 비난
- 캔슬러 위원장은 FTX 본사가 바하마에 위치해 집행조치에 시간이 걸린다고 답변했고, 일부 상원의원은 이러한 암호화폐 규제 방식의 비효율성을 지적
- 특히,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스테이블코인 시장 점유율, 미국 내 블록체인 개발자 수 등의 통계를 인용하면서, 집행조치 남발이 규제 불확실성을 높여 비즈니스와 혁신의 역외 이전을 부추긴다고 지적

- SEC와 리플의 증권법 위반 소송이 2년 7개월 만에 리플의 승리로 결정 났고, 암호화폐 업계는 산업 전반의 획기적 판결로 환영하며, 향후 산적한 SEC와 소송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을 기대
- SEC는 법원 일부 판결에 유감을 표하고, 항소 방침을 시사했으며, 캔슬러 SEC 의장은 추가 예산 확보를 통한 집행조치 강화 방침을 밝혀 암호화폐 업계와의 갈등이 지속될 전망

[출처]

- Coindesk, 'SEC Chair Gensler Cites 'Wild West' of Crypto in Case to Increase Agency's Budget', 2023.07.20.
- Decrypt, 'SEC Chair Gensler 'Disappointed' in Ripple Court Ruling on Retail XRP Sales', 2023.07.18.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영국]

英 법원, 비트코인 파일 형식 저작권 불인정 판결에 대한 항소 허용

- 라이트 박사, 비트코인 파일 저작권 주장하며 26개 기업을 저작권 위반으로 고소...1심 판결, 저작권 부인
- 항소법원, 라이트의 항소 허용...업계, 오픈 SW 개발자의 형식 위반에 따른 무분별한 소송 노출을 지적

영국 법원이 자신이 사토시 나카모토(Satoshi Nakamoto)라고 주장하는 크레이그 라이트(Craig Wright) 박사가 비트코인과 비트코인 캐시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라이트의 항소를 허용

▶ 법원, 저작권 부인한 1심 판결에 항소 허용...업계, 오픈 SW 개발자의 무분별한 소송 노출 가능성을 우려

- 라이트는 비트코인 창시자로서 비트코인 백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비트코인과 비트코인에서 파생된 비트코인 캐시가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므로 운영을 차단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
- 라이트는 비트코인 외에 코인베이스 등 총 26개 기업과 개발자를 제소하고 자신이 직접 개발한 비트코인 사토시 비전 블록체인(Bitcoin Satoshi Vision blockchain)만이 진짜 블록체인이라고 주장
- '23년 2월 영국 법원은 비트코인 블록체인의 파일 형식은 표현 특수성으로 저작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지만, 항소법원은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라이트의 의견을 수용
- 1심 법원은 비트코인 파일 형식*은 라이트가 처음 기록한 것을 고정적으로 보여줄 수 없어, 문학 작품처럼 저작권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고, 라이트가 백서 실제 작성자인지는 추후 판결 대상이라고 언급
* 블록을 구성하는 헤더와 거래 목록의 순서 등을 의미
- 라이트 변호인은 이번 항소 허용으로 라이트가 비트코인 파일 형식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하고, 지적재산권의 중요한 발전이며, 향후 비트코인 사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
- 하지만, 업계는 이번 판결이 법원이 비트코인 파일 형식이 영국 법률에 따라 저작권 보호를 받을 만큼 잘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라이트의 저작권 소유를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강조
- 비트코인 법률 방어 기금(Bitcoin Legal Defense Fund)은 이번 항소 허용은 오픈소스 개발자가 SW 파일 형식 위반을 이유로 언제든지 피소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제공한다고 우려
- 라이트가 실제 비트코인 창시자인 사토시 나카모토인지는 '24년 1월 시작되는 재판에서 판결될 예정

- 영국 법원이 비트코인 백서 작성자라고 주장하는 라이트 박사의 비트코인 파일 형식에 대한 저작권 소송에서 항소를 허용해 비트코인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재개됨
- 관련 업계는 이번 판결로 오픈소스 개발자는 SW 파일 형식 위반으로 언제든지 피소될 수 있는 위험한 선례를 제공한다고 우려했고, 라이트 박사 진영은 자신의 소유권을 인정했다고 주장

[출처]

- Coindesk, 'Craig Wright Will Be Able to Fight Bitcoin Copyright Claim in UK After Winning Appeal', 2023.07.22.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미국]

미 하원, 암호화폐 규제 명확성 규정한 '금융혁신법' 발의

- 법안, 디지털자산 정의·면제·등록 경로 등을 규정...규제 권한과 사업자 의무를 제시해 규제 명확성 확보
- 블록체인에 대한 탈중앙화 인증 경로 제시, 토큰 발행자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준 활용을 제시

미 하원이 디지털자산의 규제 불확실성 제거와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명시한 '21세기를 위한 금융혁신 및 기술 법안*'을 발의했고, 디지털자산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에서 이정표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가 제기

* Financial Innovation and Technology for the 21st Century Act

▶ **블록체인에 대한 탈중앙화 인증 경로 제시, 토큰 발행자의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기준으로 활용 제안**

- 법안은 디지털자산 관련 새로운 정의를 제시하고, 디지털자산 규제 면제 조항을 규정하며, 디지털거래소 등 중개기관이 증권거래위원회(SEC)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에 모두 등록하는 방안을 제시
- 법안은 블록체인에 대한 탈중앙화 인증 경로를 제시해 SEC 등 규제 기관이 토큰 발행자의 프로젝트에 대해 더 분명한 기준을 통해 법률 준수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점이 가장 큰 특징으로 꼽힘
- 디지털자산 발행자에 프로젝트 소스 코드를 공개하는 의무를 부여했고, 이외에 프로젝트 경제성, 개발 계획, 기타 위험 요소에 대한 정보를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새로운 공시제도 도입을 명시
- 또한, 미국 증권법을 개정해 SEC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시 반드시 '혁신'을 고려하도록 해 소비자 보호와 함께 미국 내 블록체인 산업의 혁신 유지를 중요 목표로 삼음
- 법안에 따르면, SEC는 SEC에 등록된 플랫폼에서 결제 스테이블코인 사용 허가 권한은 있지만, 결제 스테이블코인의 설계, 구조, 운영 통제권 등에 대한 감시 권한은 없음
- 반면, 디지털자산 중개자 역할을 희망하는 브로커-딜러나 대체 결제 시스템 등은 SEC 검사를 받도록 규정
- 글렌 톰슨(Glenn Thompson) 하원 농업위원회 의장은 이번 법안이 디지털자산 영역에서 절실한 규제 프레임워크 수립에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한다고 평가
- 하원은 증권법은 디지털자산의 고유 특성을 설명하지 못해 규제 격차 해소를 위한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 미 하원이 디지털자산의 규제 불확실성 제거와 규제 프레임워크 도입을 목적으로 한 금융혁신법을 발의하고, 규제 기관 권한과 디지털자산 발행자의 의무 등을 명확하게 구분
- 디지털자산 규제 명확성 확보를 위한 획기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하원 농업위원회는 증권법과 디지털자산 간 규제 격차가 존재해 새로운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

[출처]

- Decrypt, 'House Republicans Introduce Bill That Aims to Bring Regulatory Clarity to Crypto' 2023.07.21.

블록체인 기술·정책·산업 동향

디지털산업본부 블록체인산업단 블록체인정책팀

[글로벌]

부테린, 이더리움 계정 추상화 강조...이메일 계정처럼 쉬운 관리 제시

- 2개로 분리된 이더리움 계정을 스마트 계약 계정으로 통합...수수료 대납 등 다양한 서비스 등장 촉진
- EIP-4337을 통해 기능 개발 진행, 완료되면 블록체인 거래와 웹 3의 광범위한 채택을 촉진할 전망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커뮤니티 컨퍼런스에서 계정 추상화(account abstraction)*는 기본 프로토콜 변경 없이 암호화폐 계정을 이메일 계정만큼 쉬운 관리를 지원해 블록체인 거래를 활성화할 핵심 기능이라고 평가

* 이더리움은 외부소유계정(EOA, Externally Owned Accounts)과 계약 계정(CA, Contract Accounts) 2개 계정을 사용하며, 외부 소유계정은 개인키 서명에, 계약 계정은 계약 코드 저장 용도로 사용하며, 계정 추상화는 두 계정 통합을 의미

▶ 2개로 분리된 이더리움 계정을 스마트 계약 계정으로 통합...수수료 대납 등 다양한 서비스 등장 촉진

- 계정 추상화는 이더리움이 등장하기 전부터 논의된 오래된 주제로, 보안을 강화하는 멀티 서명, 특정 계정에서 수수료 대납 등 계정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존재
- 현 이더리움 계정은 2개로 나누어져 있어 스마트 계약에서 거래를 진행해야 하거나 외부 소유계정에서 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불편과 번거로움이 존재하고, 이로 인해 다양한 서비스 출현을 제약
- 계정 추상화는 이더리움 개선 프로토콜(EIP-4337)을 통해서 외부소유계정을 스마트 계약 계정으로 전환하는 작업이 진행 중이며, 작업이 완료되면 암호화폐 계정관리가 이메일 계정관리만큼 쉬어질 전망
- EIP-4337은 이더리움 업그레이드를 통해 사용자는 비 위탁형 월렛을 프로그래밍 가능한 스마트 계약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제공해 계정 추상화를 지원
- 이를 통해 사용자는 개인키 시드 문구를 이메일 계정 비밀번호 재설정처럼 손쉽게 복구하고, 수수료가 저렴한 무서명 거래, 보안이 크게 강화된 다중서명 월렛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음
- 부테린은 이러한 변화가 전 세계적으로 웹 3 채택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하고, 등록하지 않더라도 돈을 주고받을 수 있는 블록체인의 특성이 크게 부각될 것이라고 강조
- 부테린은 계정 추상화의 구체적 목표로 사용자가 스마트 계약 월렛으로 이더리움이 아닌 스테이블코인을 주고받고, 이더리움을 보유하지 않고도 세금을 낼 수 있도록 구현하는 것이라고 제시

- 비탈릭 부테린이 이더리움 업계에서 오래전부터 논의된 계정 추상화의 유용성을 강조하고, 이를 블록체인을 활용한 거래 활성화와 전 세계적으로 웹 3 채택을 촉진할 핵심 업데이트라고 평가
- 현재 추진 중인 EIP-4337은 여타 업그레이드와 달리 기본 프로토콜을 변경할 필요가 없어 편리하다고 평가하고, 손쉬운 월렛 복구, 무서명 거래, 다중서명 월렛 구현이 가능하다고 강조

[출처]

- Decrypt, 'Vitalik Buterin Explains How Ethereum Plans to Make Crypto Wallets as Simple as Email' 2023.07.19.